2018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일자리 분야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책임

최태림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이하리 지역경제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연구배경

○ 일자리 문제는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과 계층에 걸쳐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다수의 기관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산업 정책의 방향성, 지원체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 동향을 이해하고 2000년 중반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역 일자리 정책의 변화과정을 파악.

– 인천광역시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 도출.

– 정책분야 및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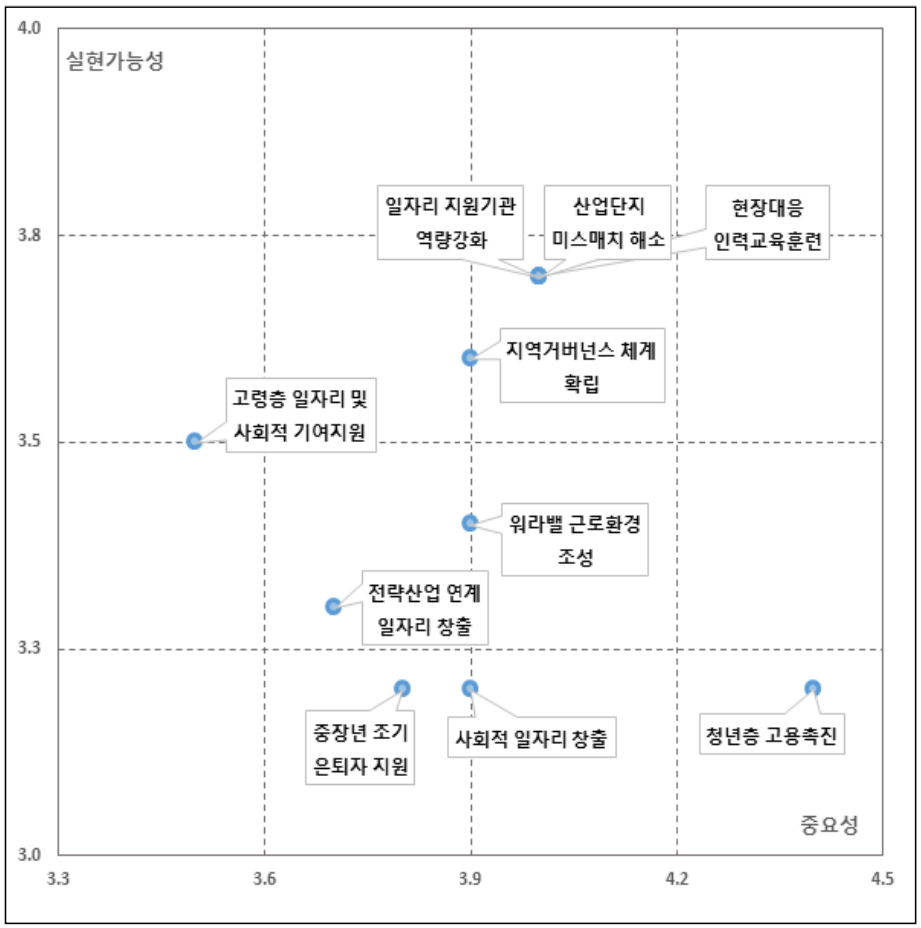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의 적합성 평가

1) 지역 일자리정책 우선순위

○ 지역 일자리정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정책의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함.

○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영역 가운데 일자리 지원기관 역량강화, 산업단지 미스매치해소, 현장대응 인력교육훈련체계 구축이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평가됨.

– 청년층 고용촉진은 중요성은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고령층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여지원은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남.



〈그림〉 인천시 일자리 정책영역의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2) 분야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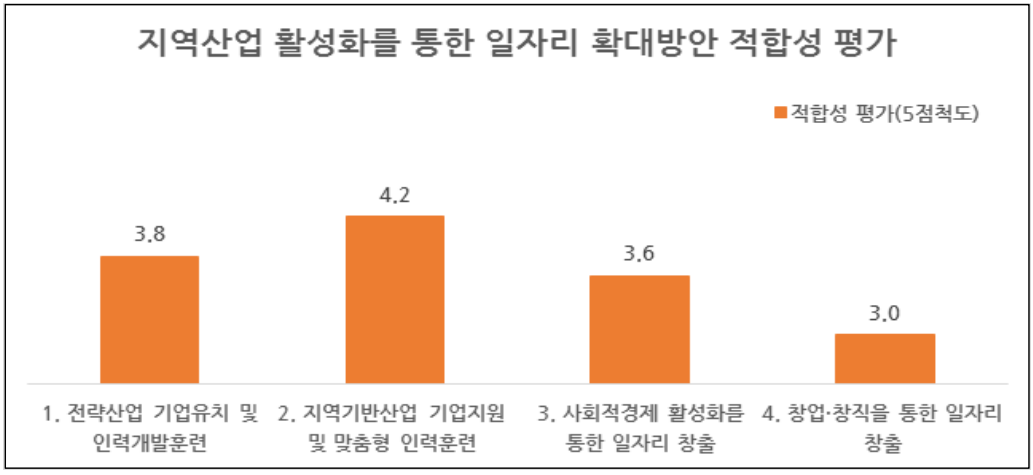
○ 지역 일자리 정책 분야를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정책방안의 적합성을 전문가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평가함.

– 5개 분야는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청년층 고용증진, 일과 삶의 균형, 인력개발 분야, 정책수행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임.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 지역산업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①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유치와 이와 연계한 인력개발훈련, ② 기존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인력훈련,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인력훈련이 4.2점으로 다른 방안 보다 더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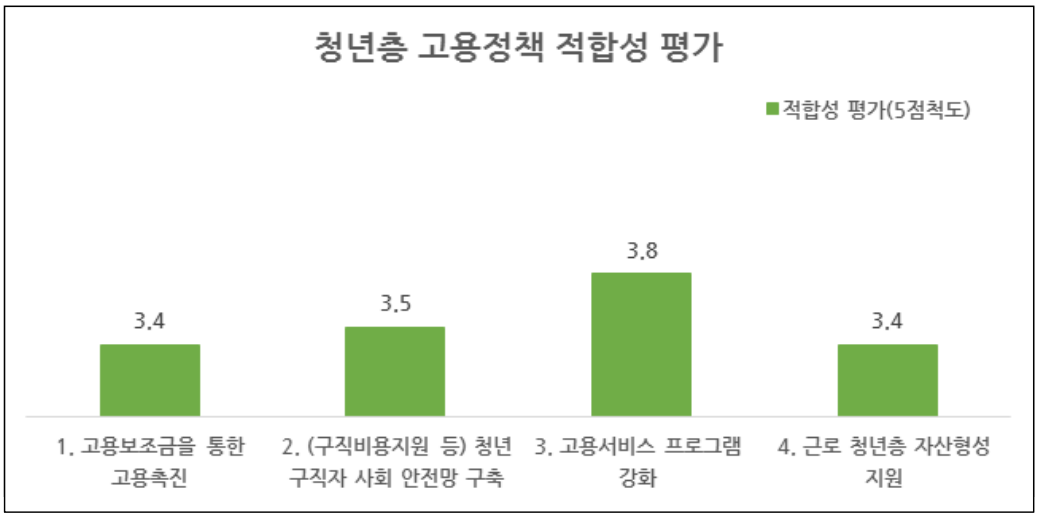


〈그림〉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적합성 평가

청년층 고용촉진

○ 청년층 고용촉진 방안으로 ① 고용보조금을 통한 고용촉진, ② 청년구직자 사회 안전망 구축, ③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④ 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강화가 3.8점으로 다른 방안 보다 적합성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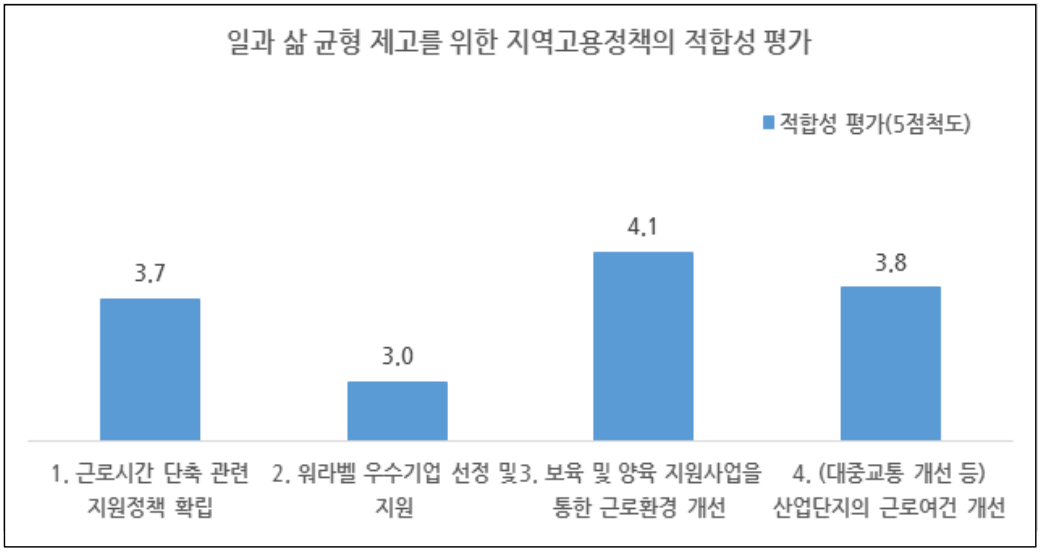


〈그림〉 청년층 고용정책 적합성 평가

일과 삶의 균형

○ 일과 삶의 균형 제고방안으로 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대책 확립, ② 워라벨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③ 보육 및 양육지원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④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의 4가지 방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일과 삶의 균형 제고와 관련해서는 보육 및 양육 지원사 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4.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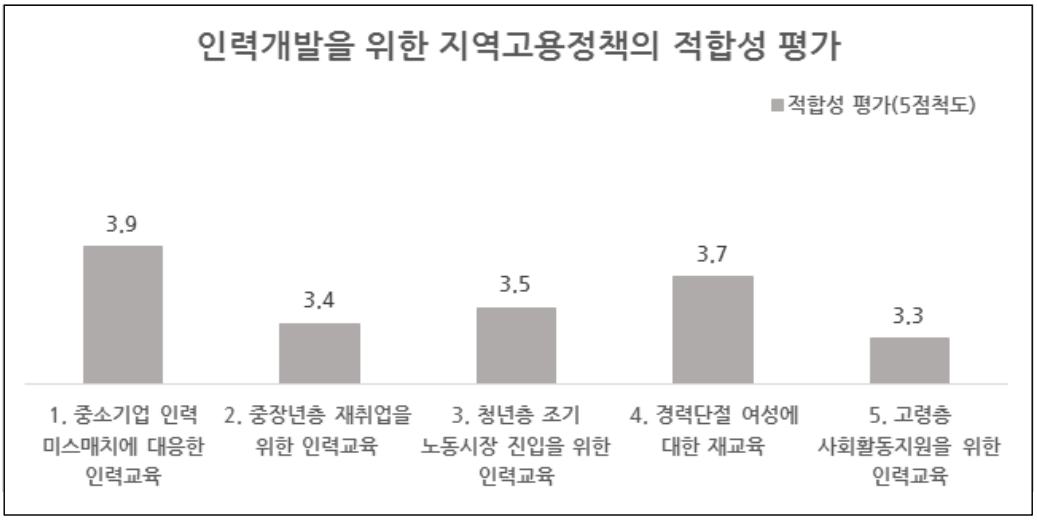


〈그림〉 일과 삶 균형 제고를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인력개발 분야

○ 인력개발 정책방안으로 ①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에 대응한 인력교육, ②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인력교육, ③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력교육, ④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 ⑤ 고령층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인력교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에 대응한 인력교육이 3.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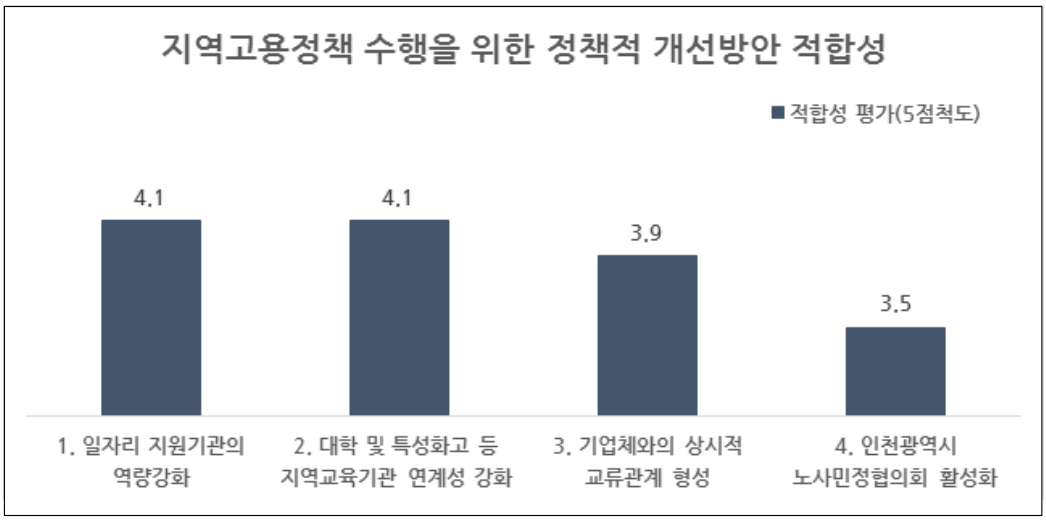


〈그림〉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정책수행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일자리 지원정책 수행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 ①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② 지역교육기관 연계성 강화, ③ 기업체와의 상시적인 교류관계 형성, ④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의 4가지 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교육기관 연계성 강화가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음.



〈그림〉 지역고용정책 수행체계 개선방안 적합성 평가

2.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제 및 방안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정책환경]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

○ [정책과제 및 방안] 전략산업의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계획을 수립.

–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화장품 산업, 첨단자동차와 같이 인천시에 상당한 기반을 갖춘 업종과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연계 인력공급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정책개발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공장의 확산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중기 인력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고령친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의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어 향후 5년 동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1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됨. 인천광역시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외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로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임.

○ [정책과제 및 방안]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

–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성과 연계 채권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원 마련.

– 다양한 사회공헌형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확대.

2) 일하고 싶은 인천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산업단지 및 제조업 밀집지역의 근로환경 개선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체가 밀집하여 고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남동공단,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임. 직주가 분리되어 있고 기업 활동 이외의 기반·사회서비스가 열악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교통 및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 무빙콜 프로젝트와 같이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공단 및 제조업 중심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공급하여 보육환경 개선.

– 공단의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새벽 및 야간 보육서비스 시범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30대-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수는 부족한 편이고 직무환경이 열악한 사회 서비스업종으로 취업 경로가 한정되어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30대-40대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무개발 및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제조-서비스 연계 여성 직무개발을 통해 여성의 취업경로를 다양화 함

– 실질적인 가족친화적 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일터혁신 시범사업 발굴

○ [정책환경]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 높은 이직률과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임. 양질의 노동생활(QWL, Quality of Working Life)은 작업장의 노동생산성 향상, 합리적인 근로문화, 체계적인 직무훈련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들의 일터문화 및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천형 일터혁신 시범사업을 발굴 및 추진.

-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일터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추진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지원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개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컨설팅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혁신일터를 선정하여 홍보

3) 청년 일자리

인천형 청년보장제도 마련

○ [정책환경]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 수준이며 청년층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약 11개월임.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가운데 상당 기간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을 하고 있음.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갈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청년보장정책 마련.

- 직업훈련, 직무교육 및 체험, 창업 등 청년이 원하는 취업 경로를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
- 중앙정부의 구직자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있는 인천시의 청년층에 대해 구직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

청년층 고용서비스 확대지원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는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수립하고 있음. 청년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청년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고자 시도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청년층에게 직장 및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에 소개하고 전파함

–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이 해당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노동시장 진입촉진 및 장기근로 유도

○ [정책환경] 청년층의 중소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임금보조금 정책이 확대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도 1석5조 인천사랑 프로젝트와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조기시장 진입과 고용지속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임금보조금 사업은 재정투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및 개편.

–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청년층의 고용보조금을 인천광역시의 기업 및 청년층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 현재 일부 업종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혜계층 및 지원규모에 대한 확대적용 방식 검토

4)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정책환경] 인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단기적인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임.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시의 지역교육기관, 일자리 동향 변화, 전략산업,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기 인적자원 개발 전략계획을 수립.

–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갱신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

–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중장기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프로그램 배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 [정책환경] 근로경력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기퇴직 및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

○ [정책과제 및 방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을 한 중장년층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인천시 중장년층 인력뱅크 구축 사업

– 인천시 중장년층 생애경력 설계 및 전직지원 서비스

– 중장년층을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및 교육 공간 확보

–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 계획수립

5) 정책수행체계 강화

인천광역시 고용정책 기획 및 집행력 강화

○ [정책환경] 지역 일자리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사업 아젠다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수행기관들이 집행하는 경향이 강함. 인천광역시만의 아젠다가 부재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기관들이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하고 인력 및 조직이 취약함.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검토.

–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5대 아젠다 선정

– 일자리 관련 시장분석, 직무개발, 사업발굴 등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가칭 '인천광역시 일자리재단' 수립 검토

지역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은 부서별, 지원기관별, 군구간의 장벽으로 인하여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이 기관에 따라 병렬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노사민정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못함.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의 주무부서, 지원기관, 군구의 주무부서 간의 협력사업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상위 협력 거버넌스 조직 구성.

–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가칭 '인천광역시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

– 인천시 유관기관 협동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 군구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성과공유 제도 운영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4

Ⅱ 지역고용정책 개요

1. 지역고용정책 개념 ····· 7
2. 지역고용정책 범주 ····· 8
3. 주요 지역고용정책 ····· 13

Ⅲ 인천광역시 지역고용시장 현황

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 19
2. 계층별 고용지표 ····· 21
3. 근로조건 ····· 24
4. 구인 및 구직 현황 ····· 25

Ⅳ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 동향

1. 인천광역시 주요 일자리정책 연차별 동향 ····· 31
2. 최근 일자리정책 및 사업 ····· 38
3. 시사점 및 문제점 파악 ····· 46

Ⅴ 정책과제 및 방안

1.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 51
2.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제 및 방안 ····· 59

참고문헌 ····· **67**
부 록 ····· **68**

표 차례

<표 2-1>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유형화 ····· 8
<표 2-2> OECD 노동시장 정책 분류 ····· 10
<표 2-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 12
<표 2-4> 직접일자리 사업 유형 및 내용 ····· 15
<표 3-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지표 ····· 19
<표 3-2> 인천광역시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 동향 ····· 20
<표 3-3>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주요지표 ····· 21
<표 3-4> 인천광역시 여성 노동시장 주요지표 ····· 22
<표 3-5> 인천광역시 고령층 노동시장 주요지표 ····· 23
<표 4-1> 2005년 기업지원과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 32
<표 4-2> 2009년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 34
<표 4-3> 2013년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 36
<표 4-4> 2018년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사업 ····· 37
<표 4-5> 인천지역 지역고용 전략과제 ····· 39
<표 4-6>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의 고용서비스 ····· 40
<표 4-7> 2018 인천광역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안 ····· 41
<표 4-8> 2018 인천광역시 청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 ····· 43
<표 4-9> 2018 인천광역시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 제도 ····· 44
<표 4-10> 2018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계획 ····· 45
<표 4-1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46

그림 차례

<그림 2-1> 추진주체 및 절차에 따른 지역일자리 사업 구분 ····· 9
<그림 2-2> 일자리 정책도구에 따른 지역일자리 사업 구분 ····· 11
<그림 2-3> 일자리 정책대상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구성 ····· 12
<그림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기본 방향 ····· 13
<그림 3-1> 인천광역시 청년층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 21
<그림 3-2> 인천광역시 여성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 22
<그림 3-3> 인천광역시 고령자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 23
<그림 3-4>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 24
<그림 3-5> 상용근로자 평균근로시간 ····· 25
<그림 3-6> 인천광역시 사업체 부족인원 ····· 26
<그림 3-7> 인천광역시 업종별 부족인원 ····· 26
<그림 3-8> 인천광역시 사업체 미충원인원 ····· 27
<그림 4-1> 2006년 경제통상국 행정조직 ····· 31
<그림 4-2> 2009년 비상경제상황실 조직도 ····· 33
<그림 4-3> 2009년 일자리 창출 계획 ····· 33
<그림 4-4> JST 일자리지원본부 조직구성 ····· 35
<그림 4-5> 2018년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 37
<그림 4-6> 민선6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비전 및 목표 ····· 38
<그림 4-7> 인천지역 지역고용전략 비전 및 목표 ····· 39
<그림 4-8>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42
<그림 5-1> 인천시 일자리 정책영역의 중요성 평가 ····· 52
<그림 5-2> 인천시 일자리 정책영역 관련 정책실행 가능성 평가 ····· 53
<그림 5-3>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적합성 평가 ····· 54
<그림 5-4> 청년층 고용정책 적합성 평가 ····· 55
<그림 5-5> 일과 삶 균형 제고를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 56
<그림 5-6>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 57
<그림 5-7> 지역고용정책 수행체계 개선방안 적합성 평가 ····· 58

Ⅰ

서 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일자리 문제는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과 계층에 걸쳐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인천광역시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에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여 지역 고용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추진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을 노동과 일자리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역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방식임.

–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에 발맞춰 인천광역시도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인력개발, 고용환경개선, 고용지원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였음.

– 하지만 지역일자리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구조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일자리 정책이 정책대상, 재원 출처 및 군구의 행정조직에 따라 단편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높음.

○ 지역의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여건에 맞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됨.

– 지역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다수의 기관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산업 정책의 방향성, 지원체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의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 동향을 이해하고 2000년 중반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역 일자리 정책의 변화과정을 파악.

– 인천광역시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도출.

– 정책분야 및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연차별 주요 업무추진계획, 시정발자취, 민선시장의 공약실천계획 등을 검토하여 2000년대 중반이후 일자리 정책 동향을 조사.

○ 지역 일자리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및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지역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 및 적합성을 평가함.

Ⅱ

지역고용정책 개요

Ⅱ. 지역고용정책 개요

1. 지역고용정책 개념

○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대 중반임 (류장수, 2013).

– 2004년에 고용노동부는 지역단위의 고용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지방노동청과 기초연구를 수행함.

– 이후 2006년에 지방고용심의회, 2008년에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협의회를 발족시켜 지역고용정책이 전개되었음.

○ 지역고용정책의 범주 및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반화된 개념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추진 주체와 정책수단의 범주에 따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추진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에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용관련 민간단체의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인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고려하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의적인 개념은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안정지원, 숙련개발, 매칭서비스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노사관계정책, 복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반면, 협의적인 개념은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지원, 숙련개발, 채용촉진을 위한 고용창출 사업영역으로 한정됨 (전명숙, 2010)

2. 지역고용정책 범주

○ 고용 및 일자리정책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영역으로 간주 되었으나 일률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현재 지역에서 수행되는 일자리정책은 추진주체, 재원출처, 사업대상, 정책수단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일자리정책을 추진주체 및 절차, 사업영역, 사업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함.

추진추체 및 절차에 따른 구분

○ 다양한 중앙 부처들이 지역단위의 고용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고용정책의 추진체계를 유형화하고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인재(2011)는 지역고용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표2-1〉참조).

– 지역고용사업 유형화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주체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중앙집중형에서는 중앙정부 부처와 해당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서비스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배제됨.

– 분권화 절충형 및 약한 분권화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사업집행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혹은 사업기관에게 집행을 재위탁하는 형식임.

– 강한 분권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형태를 의미함.

〈표 2-1〉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유형화

유형	전달체계
강한 중앙집중형	중앙정부는 정책사업을 기획하되 공공기관이나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함
약한 중앙집중형	중앙정부는 지방사업소에 사업집행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사무소는 위임된 사업을 직접 혹은 공공/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집행하여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전달
분권화 절충형	중앙정부는 사업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중앙정부산하 지방사무소에 사업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소에 협력을 얻어 서비스를 전달
약한 분권화	사업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평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혹은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전달
강한 분권화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전달

자료(출처) : 이인재(2015)의 구분을 저자가 도표로 재작성

○ 윤유규(2010)에 따르면 추진주체의 역할에 따라 지역 일자리 사업은 중앙기획집행, 중앙-지방협력, 지방기획집행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중앙기획집행 유형은 중앙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유형으로 사업의 집행은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훈련기관 혹은 대학과 같은 전담기관을 선정하거나 지방사무소를 통해 수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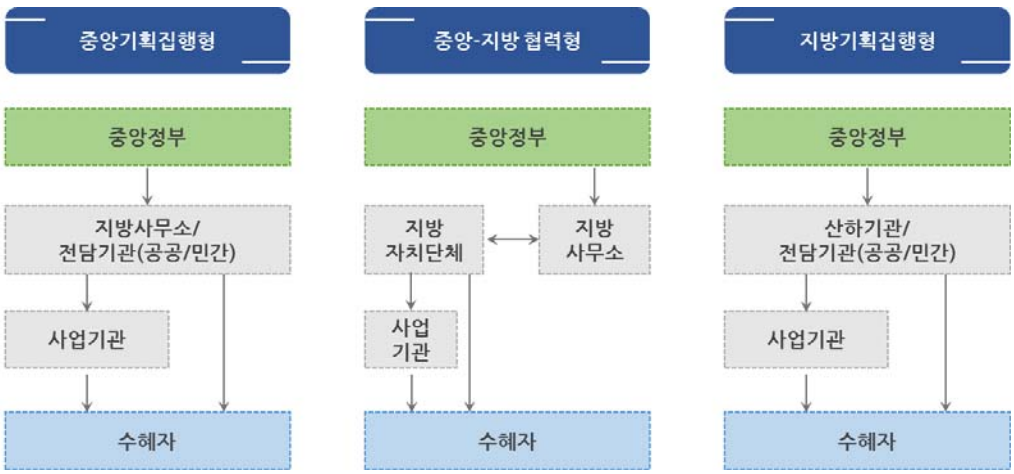
- 고용센터와 같은 지방사무소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는 유형.

○ 중앙-지방 협력 유형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임.

- 일자리 사업의 방향 및 기획 그리고 평가업무는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세부적인 수행사업의 발굴과 집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태임.
- 지방정부는 사업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집행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제안 사업의 선정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통제함.

○ 마지막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형태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획 혹은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



〈그림 2-1〉 추진주체 및 절차에 따른 지역일자리 사업 구분

자료(출처) : 윤윤규 (2010)의 도표 저자 재구성+

사업영역에 따른 구분

○ 정책수단 측면의 지역노동시장 정책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을 의미하고 있고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액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유지 및 지원사업을 의미함 (이규용, 2013).

– OECD에서 정의한 노동시장 정책은 〈표 2-2〉와 같이 9가지 정책 유형으로 구분됨. 이 가운데 ⑧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과 ⑨조기은퇴 항목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①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② 노동시장 훈련, ③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④ 고용 인센티브, ⑤ 장애인 통합, ⑥ 직접일자리 창출, ⑦ 창업 인센티브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됨.

〈표 2-2〉 OECD 노동시장 정책 분류

분류	내용
①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Public employment service)	고용안정 서비스(PES)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에 소외되는 지출
② 노동시장 훈련 (Labor market training)	공공훈련, 작업장 훈련, 통합훈련, 견습특별지원
③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일자리 순환은 일정 기간 실업자 또는 다른 목표집단 구성원으로 기존 근로자를 완전 대체하는 것을 지원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 근로자를 부분적으로 대치시키는 제도
④ 고용 인센티브 (Employment incentives)	채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인센티브
⑤ 장애인 통합 (Integration of disabled)	정규고용, 보호고용, 기타 재활 및 훈련
⑥ 직접 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사회에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행함
⑦ 창업 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실업자 또는 목표집단의 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⑧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실업보험, 부분적 실업급여, 파트타임 실업급여, 정리해고 보상, 파산보상
⑨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구직 가능성이 없는 고령 근로자의 완전 또는 부분적 조기은퇴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자료(출처) : 이혜승(2012)의 연구에서 OECD 분류 도표를 재인용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사업,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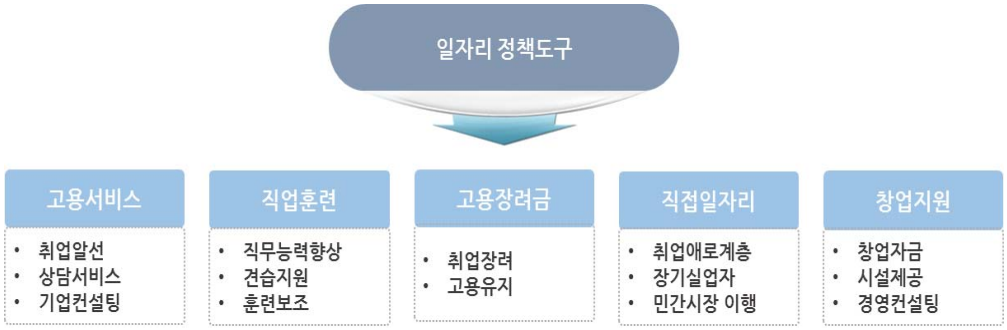
– 고용서비스 사업은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관리, 취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직업훈련은 정책대상 집단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실업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수습생의 채용을 위한 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이 있음.

– 고용장려금은 특정집단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노동비용의 일부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특정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및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등이 있음.

–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장기실업자 혹은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민간시장으로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임

–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현금지원과 같은 직접지원과 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 컨설팅과 같은 간접지원 사업이 있음



〈그림 2-2〉 일자리 정책도구에 따른 지역일자리 사업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지출하는 2017년 예산은 11조 원을 초과하고 있음.

– 직업훈련에 2조2천억 원, 고용서비스에 7천9백억 원, 고용장려금에 3조1천억 원, 창업지원이 2조2천억 원 그리고 직접일자리 사업에 2조7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됨.

〈표 2-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만명, %)

구분		2016년 예산(추경)	2017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직업훈련	22,972	22,460	-512	-2.2
	고용서비스	7,220	7,999	779	10.8
	고용장려금	28,869	31,752	2,883	10
	창업지원	21,812	22,003	191	0.9
	직접일자리	26,936	27,069	133	0.5
	(지원인원)	(8.0)	(76.4)	(-2)	(-2.1)
합계		107,809	111,283	3,474	20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환경노동위원회, http://stat.nabo.go.kr/fn03-112.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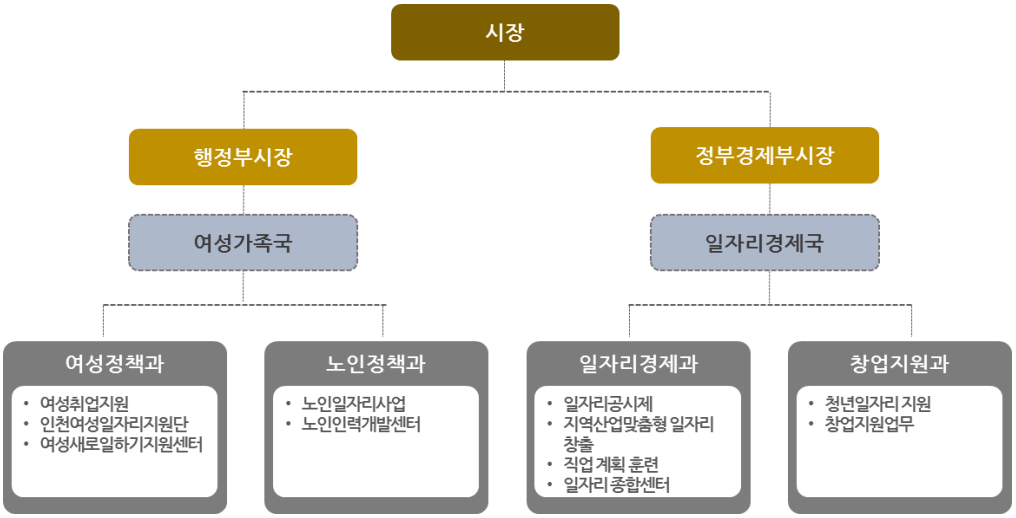
사업대상에 따른 구분

○ 일자리 사업은 사업대상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가 해당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부서에서 나누어져 진행됨.

– 청년층과 관련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사업,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사업 등이 있음.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 사업 등이 있음.



〈그림 2-3〉 일자리 정책대상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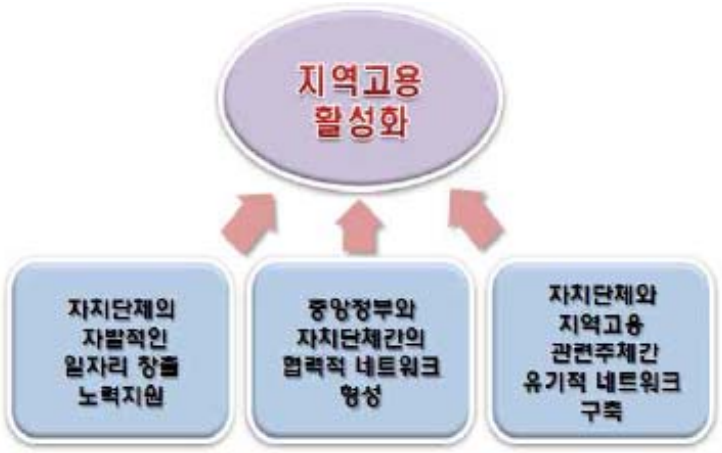
3. 주요 지역고용정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박우식 외 1인, 2012).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에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에 대한 책무를 증진시키고 중앙과 지방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



〈그림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기본 방향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매뉴얼 도표 인용

○ 공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공시내용은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구성됨.[1)]

– 비전 및 목표 제시, 추진전략, 부문별 사업계획(일자리창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인프라구축 등)으로 구성됨.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도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자문단,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의 총괄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1)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가이드라인 참조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지역고용자문단 참여, 컨설팅기관 선정 및 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한계로 일자리 개념에 대한 혼선, 관계부서의 협조 미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 부족, 단체장의 관심 부족, 평가지표 체계의 객관성 부족 등이 지적됨 (김종환 외 5인, 2014; 박우식 외 1인, 201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된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음 (2014년, 김영수 외 4인)

○ 최근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일반사업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2)]

– 일반사업유형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관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창직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일자리 안정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됨.

–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실천전략의 세부사업 시행,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역고용문제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직접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3)]으로 정의됨.

–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시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이나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 인력 등은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 (2018년 1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자료
3)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7년 12월)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정의를 인용함.

○ 직접일자리 사업은 재원주체 및 사업의 목표와 업무 특성에 따라 〈표2-4〉와 같이 유형화되어 있음.

– 사업의 목표 및 업무구성에 따라 공공업무지원형,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사회봉사·복지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비인 경우는 중앙부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재원 전부가 지방비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4〉 직접일자리 사업 유형 및 내용

유형	내용
① 공공업무지원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는 사업 •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② 소득보조형	•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참가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
③ 인턴형	•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쌓게 하여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
④ 사회서비스형	• 민간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 • 바우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다수
⑤ 사회봉사·복지형	• 퇴직자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자료(출처) : 관계부처합동(2017)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인용

○ 직접일자리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제침체기에 고용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임 (이규용, 2013).

– 직접일자리의 사업은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시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전년 혹은 전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면 직접일자리를 증가시켜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

– 이규용(2013)의 연구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약 13% 가량이 사업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성공패기지와 병행할 경우 구직기간이 단축되고 취업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직접일자리 사업의 취약점으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여러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안주하려는 경향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주무현, 2014).

Ⅲ

인천광역시 지역고용시장 현황

Ⅲ. 인천광역시 지역고용시장 현황

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 2017년 인천광역시 15세 이상 인구는 249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60만 명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153만 명과 실업자 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임.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인구는 10만 명, 취업자 수는 9만 명이 증가함.

○ 2017년 실업률은 4.7%이며 15세-64세의 고용률은 67.2%임.

– 2015년 이후 실업률 지표와 고용률 지표는 소폭 개선된 상황임. 실업률은 2015년 5.1%에서 4.7%로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5.7%에서 67.2%로 증가함.

〈표 3-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이상인구 (천명)	2,363	2,407	2,442	2,469	2,492
경제활동인구 (천명)	1,505	1,541	1,568	1,600	1,608
취업자 (천명)	1,442	1,469	1,488	1,522	1,533
실업자 (천명)	63	73	80	79	7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859	866	874	869	884
경제활동참가율 (%)	63.7	64.0	64.2	64.8	64.5
실업률 (%)	4.2	4.7	5.1	4.9	4.7
고용률 (%)	61.0	61.0	60.9	61.6	61.5
15-64세 고용률 (%)	65.1	65.2	65.7	67.1	67.2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업종 및 직종별 취업자 수 동향

○ 인천광역시의 취업자는 2013년 144만 명에서 2017년 15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44% 수준임.

– 동기간 전국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인천광역시 취업자 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준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높게 나타남.

– 건설업의 연평균 취업자 수 성장률이 8.2%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1.5% 수준임.

○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의 취업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4.0%이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3.2%,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4.6%임.

〈표 3-2〉 인천광역시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 동향

(단위 : 천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성장률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33	21	20	6	4	-41.0%
	제조업	337	325	340	348	358	1.5%
	건설업	95	106	100	133	130	8.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20	352	344	341	342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73	485	492	493	513	2.1%
	전기·운수·통신·금융	189	183	192	200	185	-0.5%
직종	관리자	23	18	17	16	8	-2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6	243	263	265	286	2.8%
	사무 종사자	260	251	264	265	279	1.8%
	서비스 종사자	143	169	157	159	167	4.0%
	판매 종사자	180	195	199	194	183	0.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	21	7	5	-37.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36	150	149	164	154	3.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2	228	235	247	226	-0.7%
	단순노무 종사자	187	198	183	205	224	4.6%
소 계		1,448	1,472	1,488	1,520	1,533	1.4%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2. 계층별 고용지표

청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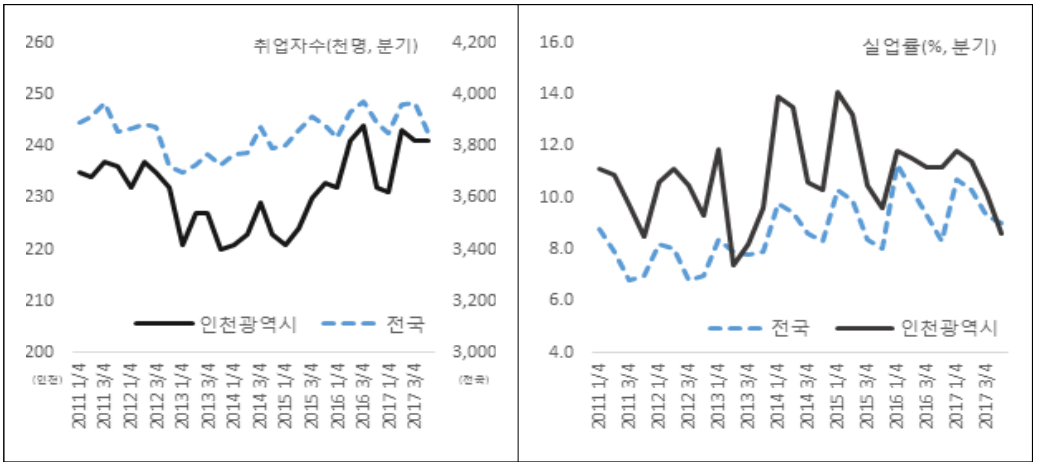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 청년층(연령 15-29세) 인구는 2017년에 53만 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6만7천 명이며 취업자 수는 23만9천명으로 실업률은 10.5%임.

- 15세-29세의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2016년에 이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이후 10%를 초과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실업률 보다 소폭 높은 추세임.

〈표 3-3〉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주요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29세인구 (천명)	543	540	538	534	530
경제활동인구 (천명)	247	255	257	268	267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296	285	280	267	263
취업자 수 (천명)	224	224	227	237	239
실업자 수 (천명)	23	31	31	31	28
경제활동참가율 (%)	45.5	47.2	47.9	50.1	50.4
고용률 (%)	41.3	41.5	42.2	44.4	45.1
실업률(%)	9.3	12.1	11.8	11.5	10.5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청년 취업자 수〉 〈청년 실업률〉

〈그림 3-1〉 인천광역시 청년층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여성층

○ 인천광역시의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017년에 125만 명이며 67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53.5%임. 그리고 취업자는 64만 명으로 실업률은 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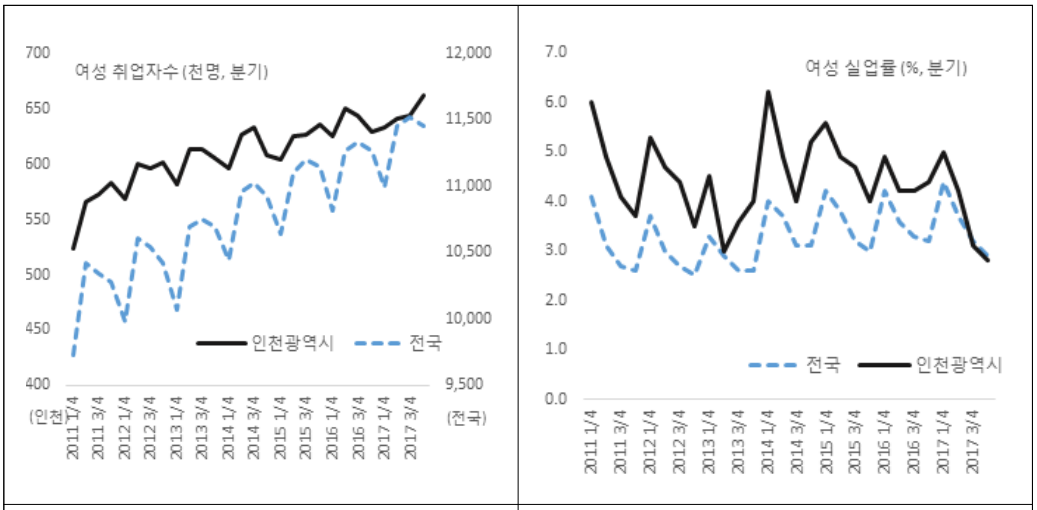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2.5%에서 2017년 53.3% 수준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여성실업률은 2014년에 5.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 인천광역시 여성 노동시장 주요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이상인구 (천명)	1,195	1,216	1,232	1,247	1,259
경제활동인구 (천명)	628	649	654	667	670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68	567	577	580	588
취업자 수 (천명)	604	616	623	637	645
실업자 수 (천명)	24	33	31	30	25
경제활동참가율 (%)	52.5	53.3	53.1	53.5	53.3
고용률 (%)	50.5	50.6	50.6	51.1	51.2
실업률(%)	3.8	5.1	4.8	4.5	3.8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여성 취업자 수〉 〈여성 실업률〉

〈그림 3-2〉 인천광역시 여성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고령층

○ 인천광역시의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17년에 50만 명이며 2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39.7%임. 그리고 취업자는 19만 명으로 실업률은 4.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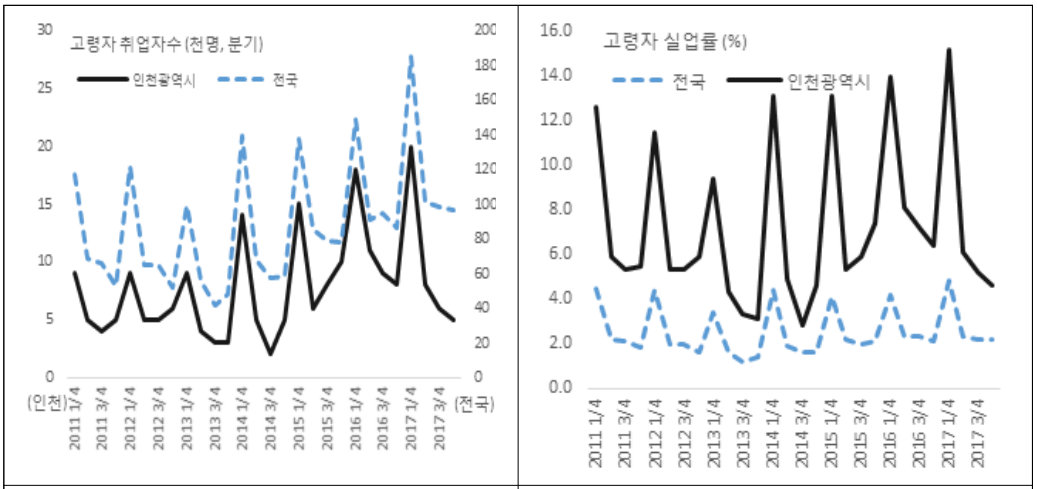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고령층 인구, 경제활동에 참여 인원,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자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자 실업률은 2014년에 3.9%에서 2016년에 6.2%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 4.8%으로 감소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전국의 고령자 실업률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3-5〉 인천광역시 고령층 노동시장 주요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60세이상인구 (천명)	391	415	444	474	505
경제활동인구 (천명)	157	168	182	189	200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234	247	262	285	305
취업자 수 (천명)	152	162	173	177	191
실업자 수 (천명)	5	7	9	12	10
경제활동참가율 (%)	40.2	40.5	41.0	39.8	39.7
고용률 (%)	38.9	38.9	38.9	37.4	37.8
실업률(%)	3.1	3.9	5.2	6.2	4.8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고령자 취업자 수〉 〈고령자 실업률〉

〈그림 3-3〉 인천광역시 고령자 분기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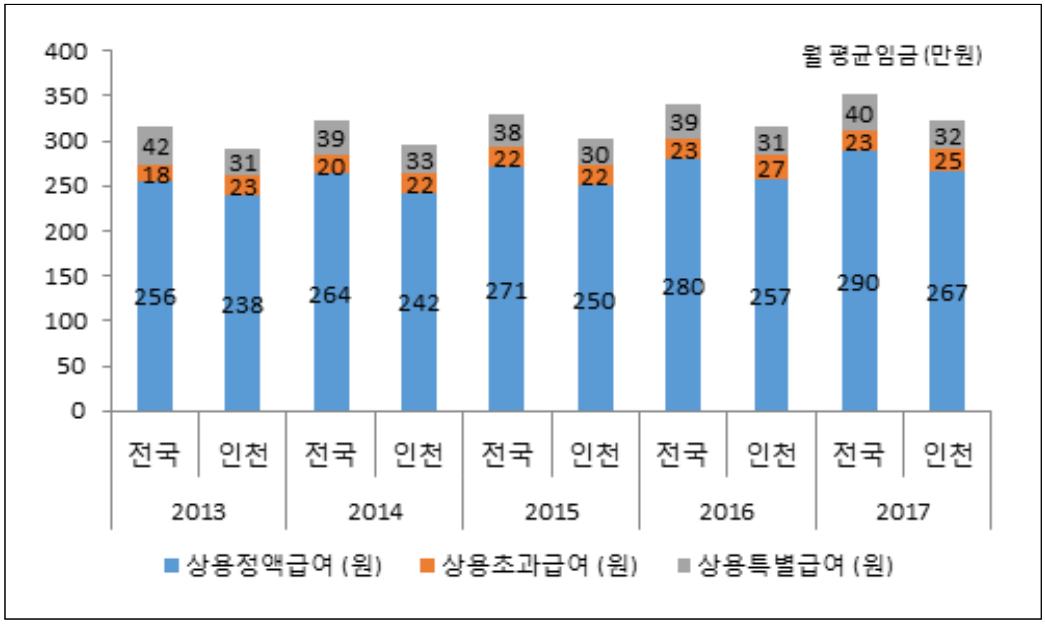
3. 근로조건

임금

○ 인천광역시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2017년 월 평균 임금은 323만원임. 전국 월 평균임금 352만원에 비해 약 28만원 가량 낮은 금액 수준임.

– 월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월 평균임금은 2013년 291만원에서 2017년 318만원으로 증가함. 지난 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2.6%으로 전국 평균 2.7%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상용정액급여는 2013년 238만원에서 2017년에 267만으로 증가하였음. 연평균 증가율은 2.8% 수준임.



〈그림 3-4〉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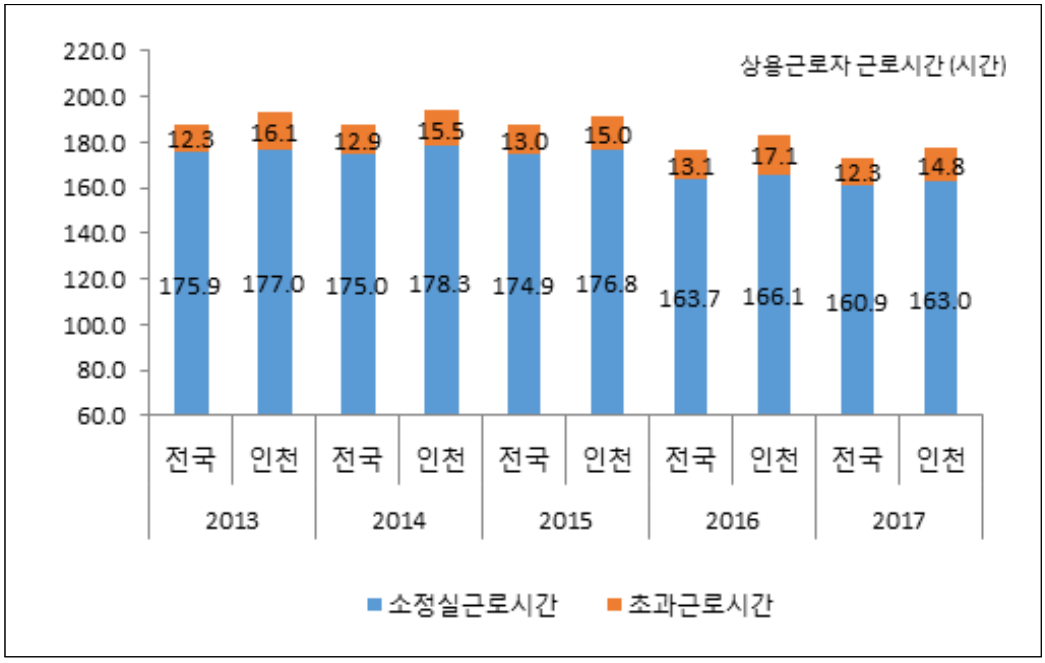
자료(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근로시간

○ 인천광역시 상용근로자의 2017년 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77.9시간임. 전국 월 평균 총근로시간의 173.2시간에 비해 약 4.7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근로시간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총 근로시간은 191.8시간이였으며 2016년 183.1시간, 그리고 2017년 177.9시간으로 감소하였음.

– 상용소정실근로시간은 2017년에 163.0시간으로 2015년 176.8시간에 비해 감소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5〉 상용근로자 평균근로시간

자료(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4. 구인 및 구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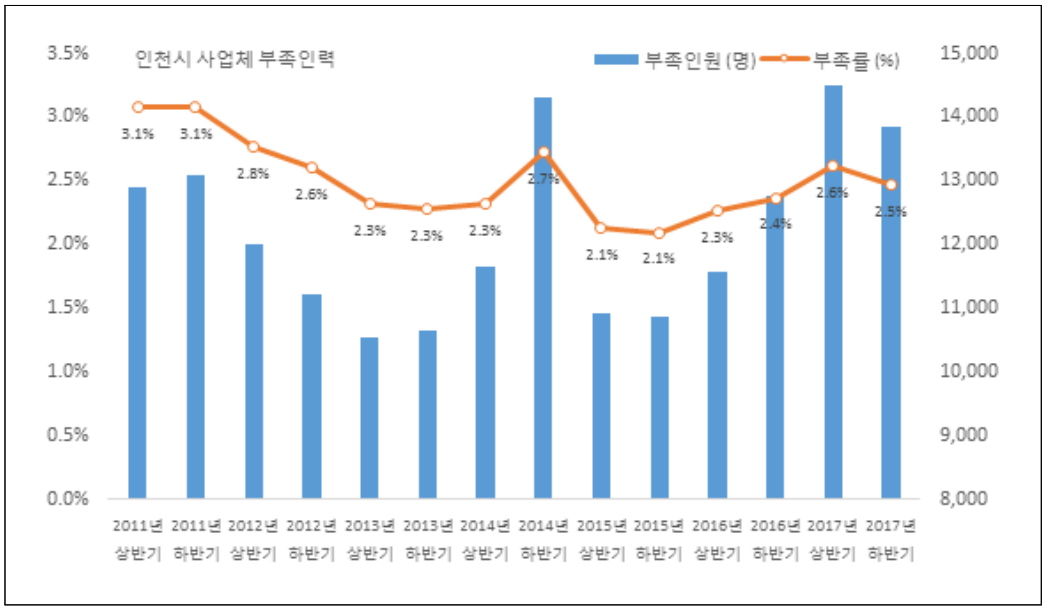
사업체 인력부족 및 미충원 인원

○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업체의 최근 5년간 인력 부족률은 2.1% – 2.7% 수준임.[4)]

– 인력 부족인원이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상반기 부족인원은 10,906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해당 수치는 2017년 하반기에 13,835명으로 증가함.

– 인천광역시의 인력 부족률은 전국 인력부족률(2017년 하반기 2.3%)보다 소폭 높은 수준임.

4)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부족인원은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고, 인력부족률은 "현원에 부족인원을 합한 전체 인원 중 부족인원의 비율"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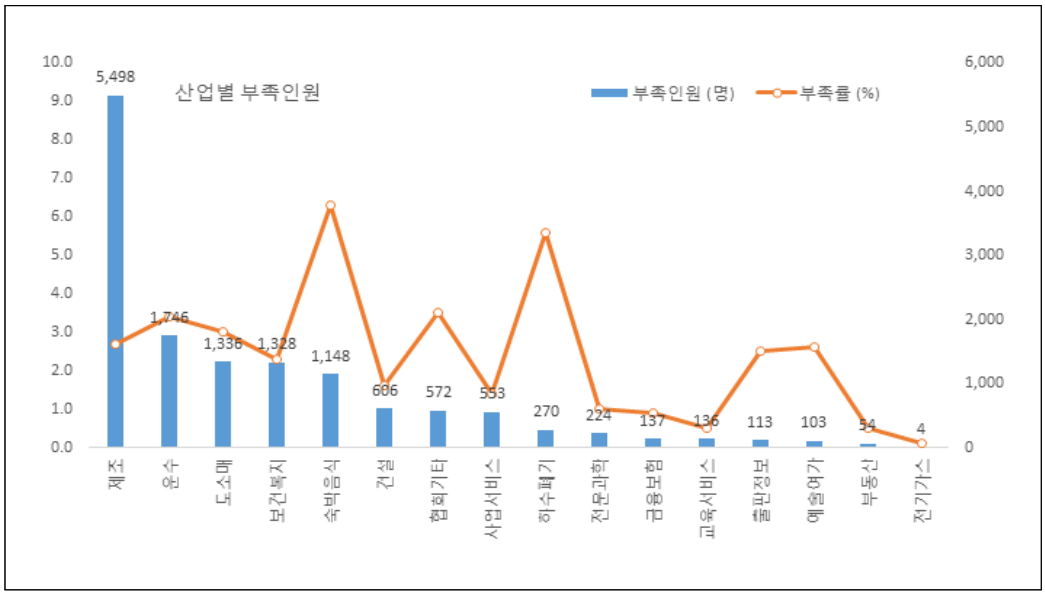


〈그림 3-6〉 인천광역시 사업체 부족인원

자료(출처) : 직종별사업체조사보고서, KOSIS 국가통계포털

○ 업종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부족인원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부족인원 가운데 제조업이 약 40%를 차지함.

– 운수, 도소매, 보건복지, 숙박음식업의 부족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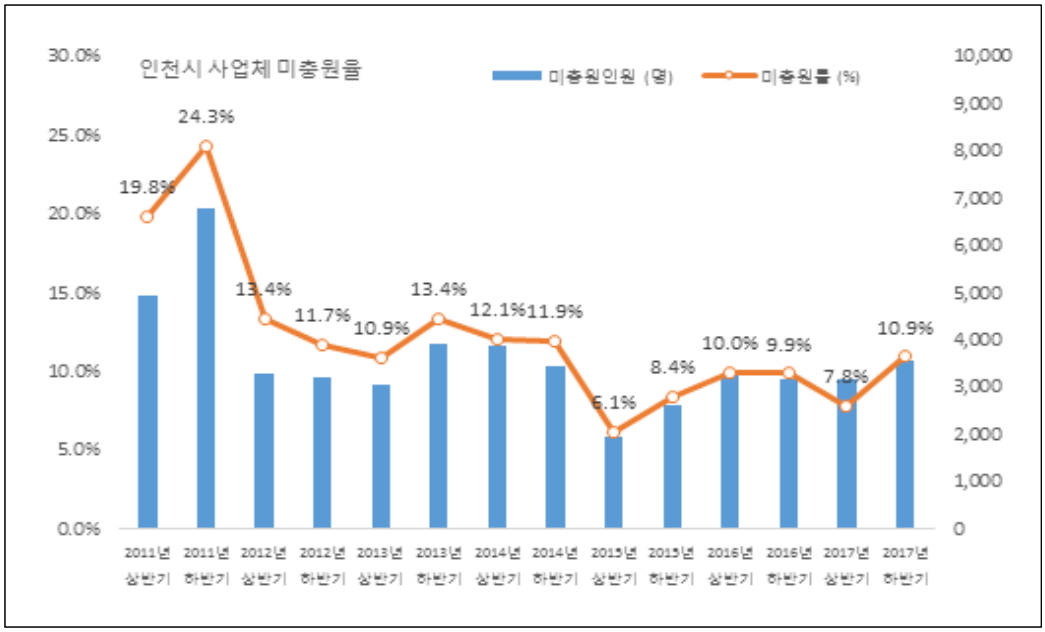
〈그림 3-7〉 인천광역시 업종별 부족인원

자료(출처) : 직종별사업체조사보고서, KOSIS 국가통계포털

○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률(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 비율)은 2017년 하반기에 10.9% 수준임.[5)]

– 미충원률은 2013년 상반기에 13.4%에서 2015년 상반기에 6.1%로 감소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2년간 미충원인원은 3,100명에서 3,50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8〉 인천광역시 사업체 미충원인원

5) 미충원률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Ⅳ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 동향

Ⅳ.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 동향

1. 인천광역시 주요 일자리정책 연차별 동향

○ 인천광역시의 일자리정책 사업 및 조직의 변화를 연차별로 파악함.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국' 및 '과' 단위의 주요 사업 가운데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 조사 자료는 유관 '국' 및 '과'의 연차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시정발자취 그리고 민선시장의 공약실천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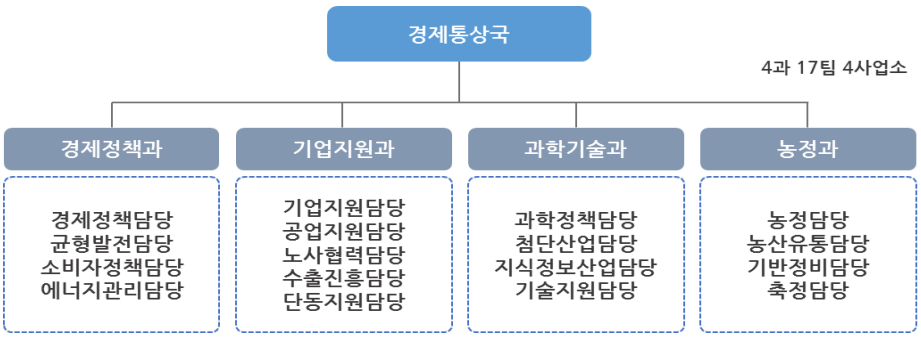
– 연차별 사업계획 및 행정조직의 변화를 조사하여 일자리정책 위상의 변화와 주요 사업내용의 변화과정을 검토함.

– 분석기간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설정함.

2002년-2006년 (민선3기)

○ 민선3기에 해당하는 2002년에서 2006년 기간에는 일자리정책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정책은 기업지원과의 일부 업무로 배정되어 있음.

– 해당기간의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농정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지원과의 노사협력팀이 주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함.



〈그림 4-1〉 2006년 경제통상국 행정조직

○ 해당 기간의 지역 일자리정책은 노동행정의 전통적인 영역인 실업대책, 노사안정, 근로자복지, 기능인양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건전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능인 육성 및 취업알선, 청년실업대책 추진 등의 일자리정책이 추진됨.

– 노동단체에 대한 민간보조지원, 노사정협의회 운영,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 진행되었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으로 채용박람회, 정보·통신, 산업응용 업종의 직업훈련 등을 진행.

〈표 4-1〉 2005년 기업지원과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건전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건전한 노동운동의 전개를 위한 노동단체 지원·육성	• 건전 노동단체 육성·지원 : 4개단체 15개사업 • 근로자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사업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노사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구축	• 노사간 협의기구 운영 •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능인 육성 및 취업알선 활성화	실업자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고용촉진훈련사업 • 건설기능인력양성교육훈련 • 2005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취업정보센터 운영
청년실업대책 추진	추진 중인 실업대책사업의 내실화	•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취업지원 (채용박람회, 취업정보운영) •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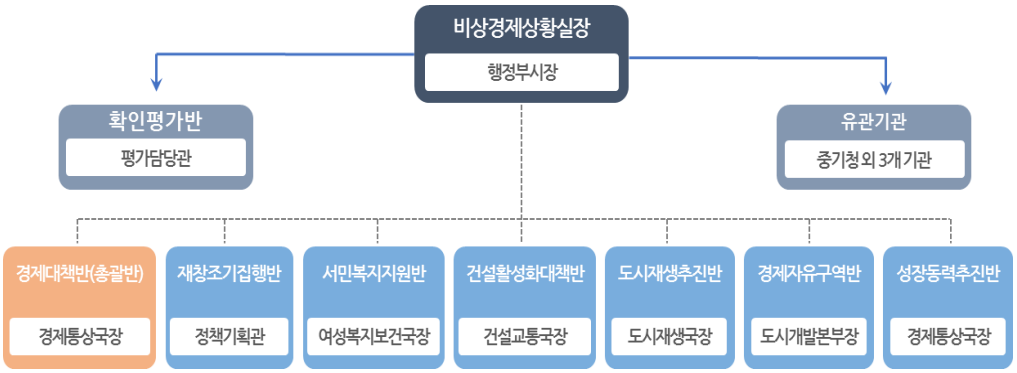
2006년-2010년 (민선4기)

○ 민선4기에 해당하는 2006년에서 2010년 기간의 초기에는 이전의 부서체계가 유지되다가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고용'이라는 표현이 담당부서의 명칭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2007년과 2008년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가 기업지원과의 업무로 유지되었음. 2009년에 일자리 업무가 경제정책과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경제고용과가 담당함 (〈그림 4-2〉 참조).

– 2009년 경제통상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제고용과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VISION 인천건설'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나타남.

– 또한 단기 및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체화함. 공공부문 채용, 공공부문의 행사사업에 따른 고용유발, 도시개발에 따른 고용유발로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함 (〈그림 4-3〉 참조).



〈그림 4-2〉 2009년 비상경제상황실 조직도

○ 2009년 실행사업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청년부문의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됨.

– 또한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직업훈련 체제 구축,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존의 사업체계의 개선을 추진함.

–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됨.

〈그림 4-3〉 2009년 일자리 창출 계획

〈표 4-2〉 2009년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주요 사업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인턴십 : 공공기관, 기업체, 해외인턴 1,200명 • 청년맞춤형 직업훈련 : 16개 직종 180명 • 기능경기대회 지원
취약계층보호사업	• 저소득실직자 공공근로사업 : 4대 분야 91개 사업 • 취약계층 직업훈련 : 20개 직종 350명 • 사회적기업육성 : 인증지원 5개소
종합일자리 공시제	• 유관기관 일자리정보 공유 • 사업별 육성시책과 수요예측 • 전략산업 활동 및 고용동향 공시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 인적자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인력수요예측
취업정보센터 운영	• 야간, 예약제 운영 • 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취업설명회 개최
일자리 박람회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노동부, 민간단체 공동참여
일자리 나누기	• 노사민정 협력 및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경영안정자금 및 인턴사원 우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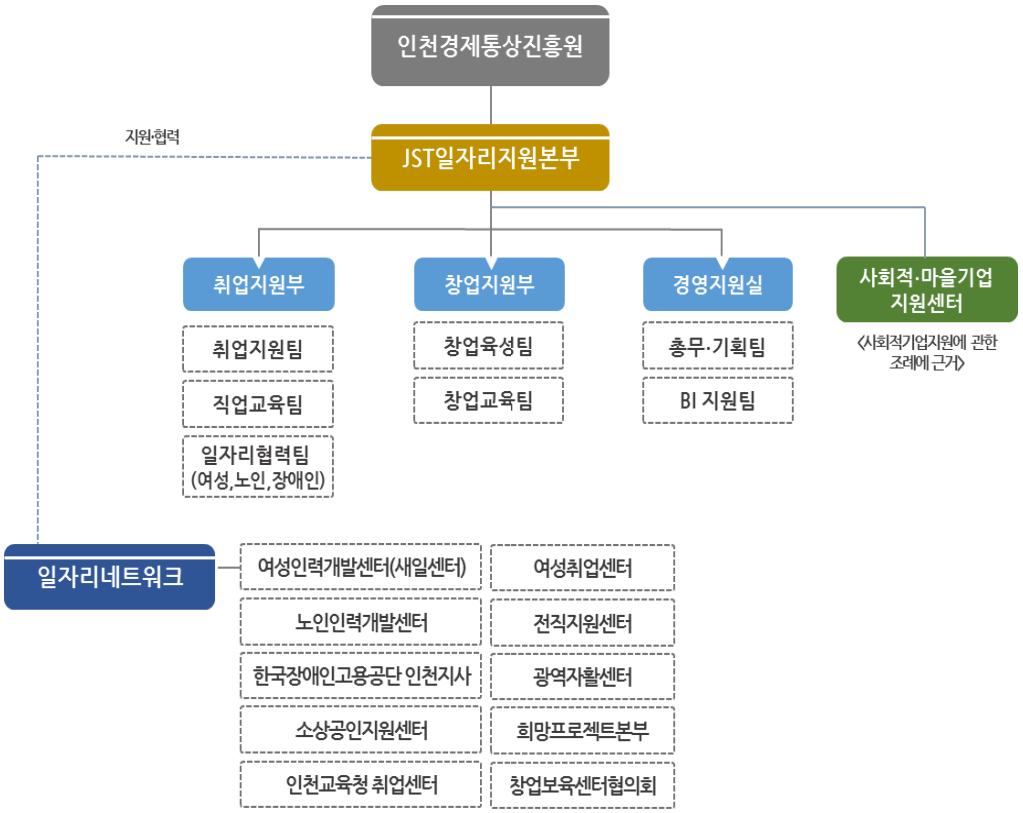
2010년-2014년 (민선5기)

○ 민선5기에 해당하는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에 인천광역시는 시설 인프라 건립, 창업 지원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 설립을 진행함.

– 경제수도정책관실을 설치하고 일자리정책의 물리적인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을 추진함.

– (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JST일자리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취업 및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

– '과' 단위의 행정조직으로 일자리창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청년인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의 업무를 추진함.



〈그림 4-4〉 JST 일자리지원본부 조직구성

○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사업으로 일자리영향 평가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개선, 맞춤형 취업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함.

–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분산된 행정체계를 (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JST일자리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취업지원부와 창업지원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진행.

– 시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인천노사민정협의회 산하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인천광역시 본청 그리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는 정책을 추진.

〈표 4-3〉 2013년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일자리 메카 : JST일자리지원본부 설치	취업·창업 지원기관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중복(유사)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	• 통합사무 : JST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센터, 청년인턴, 일자리박람회
JST 창업지원	청년 실업문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문화 조성	• JST 프로젝트를 통한 창업 확대 : 205개→300개 • JST타워 건립으로 One-Stop 서비스 지원 • 창업공간의 획기적 확대 : 7개소 218실→10개소 375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스매치 해소 대책 지속 추진	• 지역공동훈련 : 전국 최초의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 • 병역특례업체 지정 확대 : 기업설명회· • 순회컨설팅 등 집중 개최 • 청년인턴 사업 개편 : 취업 확대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업종별 인건비 지원액을 차등화, 정규직전환자 취업장려금 지원 등 신설 • 고졸 취업자 확대 : 방문특강,기업현장 견학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및 민간부문으로 공감대 확산	• 민간위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 : 시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2014년-2018년 (민선6기)

○ 민선6기에 해당하는 2014년에서 현재까지의 일자리정책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일자리정책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에 일자리경제국이 신설되어 지역일자리 사업이 '국' 단위의 사업과제로 부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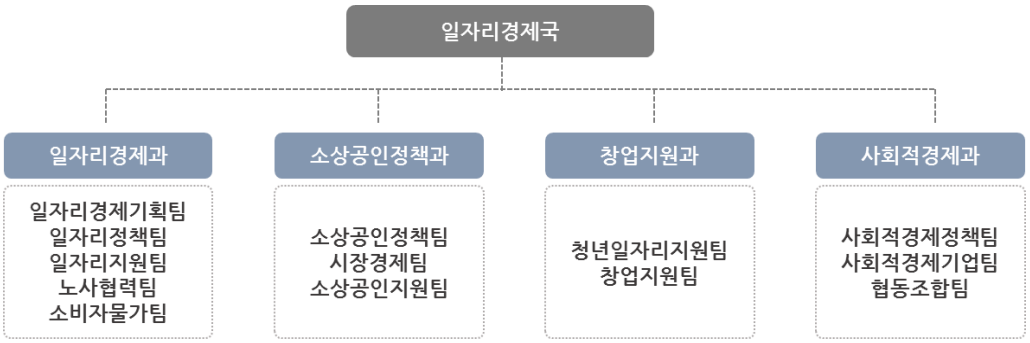
– 2017년에 설치된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생의 취업지도를 지원하는 곳으로 인하대와 인천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교육훈련,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

–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매해 일자리 창출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4-5〉 2018년 일자리경제국 조직도

○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

–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구직 청년층에 대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 창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창업보육 지원강화, 창업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 진행.

〈표 4-4〉 2018년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사업

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일자리 중심 시정 운영체계 구축	시정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일자리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일자리 거버넌스」, 「애인 일자리 추진단」, 「일자리 인센티브 시스템」구성 • 「민·관 협력 일자리 상생협력」 체계 마련 :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1군·구 1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
인천형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	중장년을 비롯한 취업 취약층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	• 중장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사회공헌 일자리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유사기관 또는 기업으로 재취업 • 청소년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다양한 적성 및 능력 개발 기회제공 • 취업 취약층 일자리 리스타트 지원 : 은퇴 시니어층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전문 교육
일자리 살리기 중소기업 희망 프로젝트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 중소기업 사업 개편을 위한 뉴비즈니스 모델링 사업 : 학생 전문가(교수) 기업이 팀을 구성, 컨설팅과 대안 마련 • 인천 산업단지 무빙콜 서비스 : 렌트 차량 2대를 시범 운행,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 •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 뿌리산업 신규 채용자, 재직자, 기업체에 패키지형 일자리 지원

2. 최근 일자리정책 및 사업

1) 분야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목표 및 계획수립 분야

○ 공식적으로 일자리 분야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임. 최근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인천지역 고용전략수립 보고서를 발간함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민선시장의 출범에 맞춰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함.

– 최근 수립한 종합계획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2014년 9월에 수립한 계획임.

– '신성장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일자리 목표는 당시 중앙정부의 핵심시책인 고용률 70%를 달성을 인용하여 2018년 고용률 70% 도달을 목표로 제시함.

【 비 전 】

신성장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 표 】

신성장산업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률 2014년 66.4% → 2018년 70.0% (OECD기준)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지역특화산업의 구조고도화

- SW인증 · 특허출원 지원 2014년 44건 → 2018년 92건
- 벤처 창업 성공 2013년 350개사 → 2018년 1,100개사

〈그림 4-6〉 민선6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비전 및 목표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4년)

○ 단기 처방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천지역 고용전략을 2017년에 수립함.

– 인천광역시 지역실천고용전략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상생고용전략"을 제시하였음.

〈그림 4-7〉 인천지역 지역고용전략 비전 및 목표

자료(출처) :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7)

○ 세부적인 전략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5대 공통과제와 지역이 선정하는 5대 자율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세부전략 과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년일자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발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임.

〈표 4-5〉 인천지역 지역고용 전략과제

구분	전략과제
공통과제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을 위한 개선방안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불합리한 차별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자율과제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청년층 행복지수 증가를 위한 일자리 확대
	인천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기초자치단체 맞춤형 고용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료(출처) :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7)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구인구직 개척, 직업진로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취업알선은 구직신청 및 상담, 구직알선,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인자 및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망은 Work-net을 활용하고 있음.

– 일자리 희망버스 및 잡스(Job's)인천 사업을 통해 현장에 다가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

– 이외에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및 청년공간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표 4-6〉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의 고용서비스

구분	내용	목표	예산구분
취업지원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사업	취업자 수 5,100명	시비
일자리 희망버스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상담 1500명 취업자 수 300명	시비
잡스(Job's)인천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장형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2000건 취업자 수 150명	시비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구직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구직활동 독려	구직청년 400명	시비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년 커뮤니티 활동공간 지원, 취업 및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자 수 100명	시비

자료(출처) : 일자리종합센터 내부자료

직접일자리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직접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소 제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고용취약계층인 여성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대료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제조업 및 유관업종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차 기숙사 임차료를 8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중앙정부 협력(공모)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하는 사업임.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세부 내역은 연차별로 조금씩 변화함. 2018년에는 혁신프로젝트와 일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의 혁신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구도심 및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성됨.

– 2018년 혁신프로젝트는 2017년에 작성한 지역고용전략과제 보고서의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기획하도록 함.

–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주로 전략산업영역(물류, 뷰티, 항공)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동시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과 전통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강화군 지역의 취업알선 강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등으로 구성됨.

– '마중물상생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 창직 지원 사업임.

〈표 4-7〉 2018 인천광역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안

프로젝트명	순번	사업명	고용창출목표(명)	기관/비고
〈1〉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1	전략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	150	인천TP/인하대
	2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400	인천TP
	3	산학협력 청년 희망이음	130	산단공/인하대
〈2〉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4	산업단지커뮤니티-블록톡!!	70	남동산단경협
	5	산업단지 무빙콜 프로젝트	25	산업단지공단
	6	강화 일자리 잡(JOB)다(多) - 강화산단 론칭 프로젝트	200	고용전략연구소
〈3〉 마중물상생 일자리 만들기	7	강화 청년·문화·일자리 공동체'청춘마을'	25	진강산마을공동체
	8	4차 산업혁명 시대, 빈집 스마트 도시 농부	20	빈집은행
	9	『상상마당』프리마켓 플랫폼 구축	20	일터와 사람들
	10	젊은 인천 만들기'내일(My Job&Future) 프로젝트'	138	고용전략연구소
	11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플랫폼		추진단/경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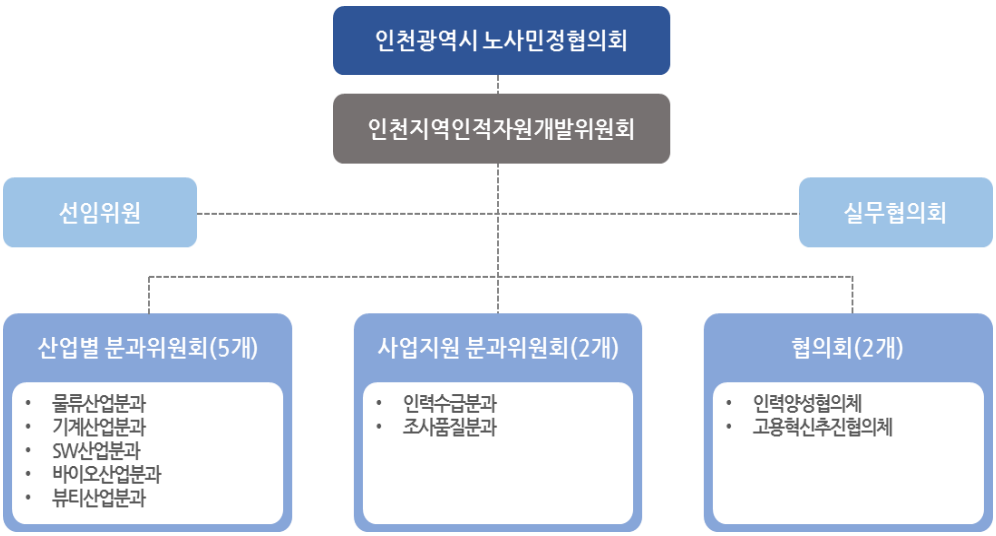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

○ 인천지역 고용정책개발을 위한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지역의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에 구축되어 인력양성계획 수립,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팀, 일학습병행제 확산팀, 고용혁신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4-8〉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2) 정책대상별 일자리 정책

청년층

○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는 구직단계의 탐색지원, 역량강화, 취업알선 서비스와 취업자의 근속지원으로 구성됨 (〈표4-8〉 참조).

–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직종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위한 소통 공간 제공, 취업코칭 및 면접비용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청년층의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청년을 신규로 5명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에게 청년고용을 장려함.

〈표 4-8〉 2018 인천광역시 청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

유형	사업	예산구분	고용효과(명)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탐구지원	청년의 소통+공간을 위한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시	3,000
	내 집과 가까운 일자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년JOB카페조성	시	3,000
	청년구직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면접지원서비스	시	400
청년취업 희망을 높여주는 취업역량 강화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맞춤형 취업코칭제 추진	시/기	1,300
	인천형 8대 전략사업 연계 세대공감 일자리 창출	시/기	120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청년인턴사업 추진	시	400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시/기	500
	여대생 취창업 진로지도센터 지원	시/기	100
	취업률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기	300
청년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건 개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시	1,000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시	315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창업지원과를 조직하여 청년의 창업지원 관련 정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표4-9〉와 같이 다양한 신규 정책들이 발굴 및 운영되고 있음.

– 최근에 창업지원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제안된 사업이 많은 상황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의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임.

– 창업기반시설인 인천 창업허브 조성은 약 200호의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주거와 창업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활용될 전망.

– 창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청년펀드를 모태펀드와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고, 퇴직인력과의 매칭, 사업계획을 위한 컨설팅 지원, 창업경진대회, 다문화 인력에 대한 창업 기회 제공, 조기은퇴자에 대한 창업 지원, 수공예 기술교육과 연계한 창업, 소규모(1인창조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표 4-9〉 2018 인천광역시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 제도

유형	사업	예산구분	고용효과(명)
창업메카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창업 인프라 구축	인천창업허브 조성	국/시	1,300
	국제 Co-working space개설	시	80
	INSTA(Incheon Start-up)Café 구축 및 운영비	시	100
(협업) 창업붐 조성을 위한 민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우리함께 창업지원	시	10
	i-스타스업 한마당개최	국/시	150
	창업동아리 지원	시	20
	1인 미디어 창업 추진	시	120
	민간과 협약한 청년창업공간 지원	시	60
	인천 창업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시	40
	기업가 정신교육 지원	시	200
창업붐 조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국/시	300
	창업펀드조성	시	50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국/시	100
	인천 창업보육 특화 시스템 구축	시	10
	세대공감 인스타 기업 육성	시	100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시	100
	청년창업 챌린지 사업	시	40
	e-다누리 창업센터 운영지원	시	100
	40플러스 시니어 창업 스쿨	시	30
	전통기술창업 대잇기 사업	-	30
	창업보육센터 지원	국/시	300
	인천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국/시	120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여성

○ 인천광역시의 여성일자리 사업은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여성 일자리 및 여성대상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연구와 조사, 구인처 발굴, 창업자 발굴, 새일센터 역량제고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

– 인천광역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광역센터를 포함하여 8곳이 지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여성복지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구직자 연계 프로그램, 여성인턴사업, 직업훈련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 기업환경개선, 취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 4-10〉 2018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계획

유형	사업명	2018년계획	비고 (산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창업 연계	2,100	취업자 수
	구인자수	7,000	구인자수
	구직건수	5,000	구직건수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제	40	참여자수
	결혼이민여성인턴제	5	참여자수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105	수료자수
취업연계사업	여성취업박람회	1,000	구직참여자
	여성친화일촌 기업협약	30	협약업체수
	센터운영위원회	2	회의개최수
	기업체협력망	2	회의개최수
	취업네트워크	12	회의자료공유
	찾아가는새일센터	50	운영횟수
	동행면접	55	동행면접자수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교육 및 멘토링제	90	참여자수
	기업환경개선	4	수혜기업수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200	교육수료자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부자료

고령자

○ 인천광역시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은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 보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익활동형은 노인케어, 취약계층 상담 및 교육,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됨.

– 시장형은 학교급식, 스쿨존 교통지원, 아파트 택배, 공동제조 등 수요처에 계약기간 동안 근무함.

〈표 4-1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분야	사업기간	내용(프로그램)
공익 활동 (4개유형 20개 프로그램)	노노케어	연중형 9개월	독거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취약계층지원 (5개프로그램)	9개월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아동 등 취약가정 (노인제외)을 방문하여 상담, 교육,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공공시설봉사 (10개프로그램)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보육(교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내 필요한 공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활동
	경륜전수 자원봉사 (4개프로그램)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 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시장형	서비스제공형	수요처 계약기간	학교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스쿨존교통지원, 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기타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수요처 계약기간	제조판매 :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EM(미생물 활용 소독제품)제작판매, 반찬매장 등 공동작업 : 천연비누, 쇼핑백, 앞치마 제작 등
	인력파견형	수요처 계약기간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3. 시사점 및 문제점 파악

○ [기관/조직] 일자리정책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국이 2017년 2월에 신설되어 일자리정책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행정 및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기관의 체계가 아직 충실히 구축되지 못함.

– 기존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였음.

– 현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조직규모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일자리종합센터는 '단'급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 [계획/기획]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황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의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2014년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시책이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동일하게 인천시 목표로 수용하였고 목표 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의 체계적인 기획이 부족함.
-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혜 인원 및 취업 인원에 대한 목표가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 못하였고,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근거 등이 부족하였음.
- 중장기적 일자리정책 목표의 부재로 인하여 단기처방 중심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발생.

○ [산업정책 연계] 직접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자리정책을 통해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부문은 매우 제한적임. 일자리정책의 집행을 통해 인천광역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수적임. 하지만 일자리 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연계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일자리정책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두 정책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물류산업, 뷰티산업, 항공산업 분야의 기업체 기술·컨설팅지원과 고용연계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 [인력개발] 인력개발 사업은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로 제조업 및 산업단지의 기업체의 수요와 관련된 영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력개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이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교육훈련의 기획 및 국가사업과의 협업강화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일자리종합센터에서 2016-2017년에서 수행한 주력산업 맞춤형 취업지원 플랫폼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특성화고의 수요를 수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임. 지역의 특성화고와 폴리텍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청년층 일자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인 인프라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성과를 평가하기 이른 시점임. 청년층에 대한 고용실태는 거시지표 및 미디어를 통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청년층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실정임.

- 청년층 구직자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진입촉진, 장기근속 유도, 자산형성 지원 등의 중앙정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제5차 일자리위원회(2018년 3월)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등이 확대 운영될 전망.
- 인천광역시도 1석5조 (청년 재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청년면접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면접복 지원 및 비용지원), 뿌리산업 패키지형 프로젝트 (신규취업자에 대한 경력형성금 지원) 등의 청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들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성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됨.

○ [근로여건]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통계를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저임금의 장시간 근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특히 일·가정 양립과 같은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 취약한 실정임.

- 일부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운행이나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지만 인천시의 광범위한 산업단지 지역과 수많은 중소업체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부터, 5-49인 기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에 적용을 받게 됨.
-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개발이 요구됨.

○ [협력거버넌스]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인력개발 훈련기관,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 사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역고용정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 인천의 고용 거버넌스는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Ⅴ

정책과제 및 방안

Ⅴ. 정책과제 및 방안

1.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 인천광역시의 지역 일자리정책은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취약, 인력개발의 다양성 부족, 청년층에 대한 정책 활성화 요구, 근로여건 개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및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일자리정책 수행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10인에게 일자리정책 우선순위 및 분야별 정책방향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일자리정책의 분야는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및 인천광역시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5가지 분야로 구분하였음.

– 5가지 분야는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청년층 고용증진, 일과 삶의 균형, 인력개발 분야, 정책수행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임.

1) 지역 일자리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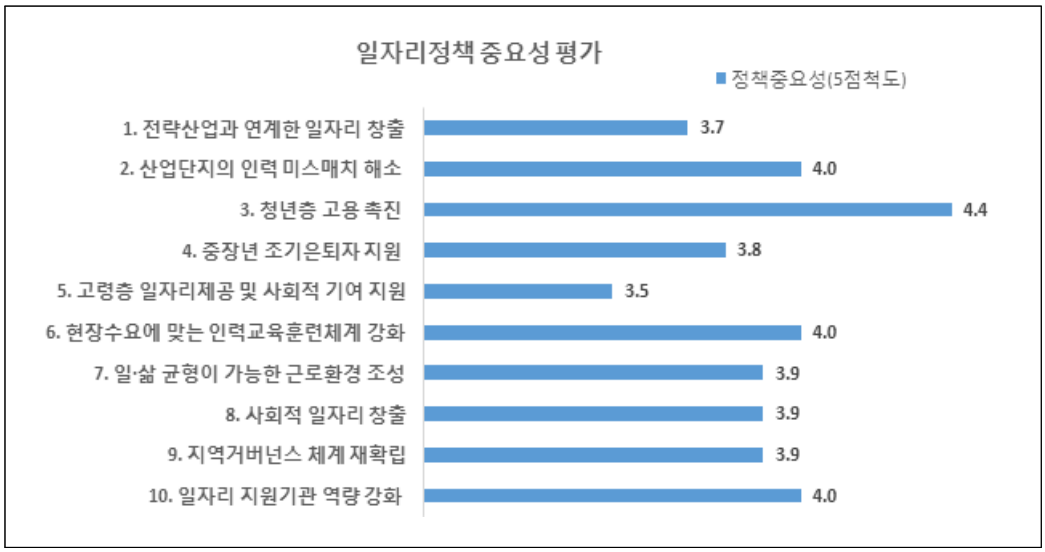
지역 일자리 정책영역의 중요성

○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영역 가운데 청년층 고용촉진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평가됨.

– 5점 척도에서 4.4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남.

○ 산업단지 인력미스매치 해소,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교육훈련체계 강화, 일자리 지원기관 역량강화가 4.0점이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조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3.9점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조사됨.

–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3.7점, 중장년 조기은퇴자 지원은 3.8점, 고령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기여 지원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됨.



〈그림 5-1〉 인천시 일자리 정책영역의 중요성 평가

지역 일자리정책 실행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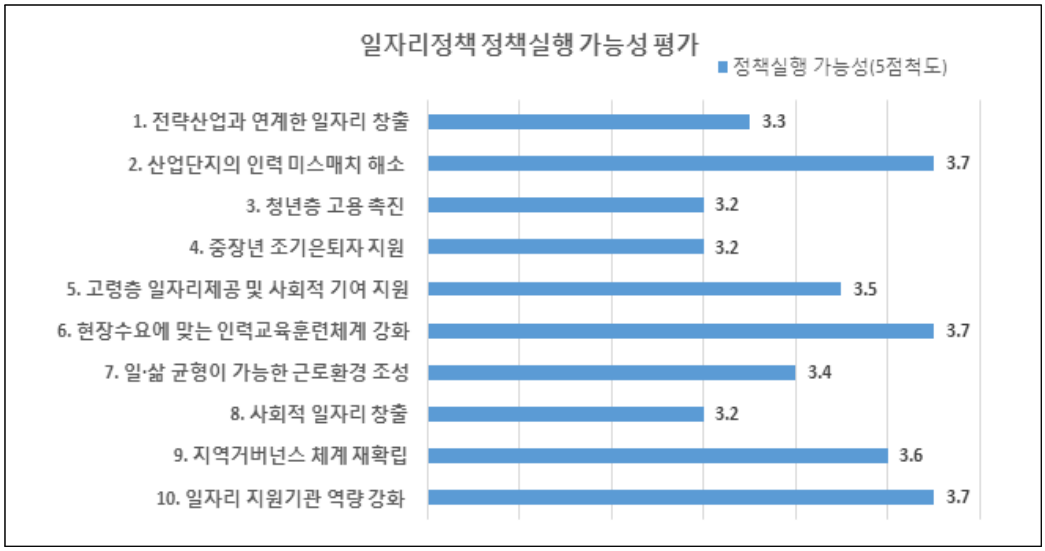
○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산업단지 인력미스매치 해소,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교육훈련체계, 일자리 지원기관 역량 강화로 모두 3.7점으로 평가됨.

– 지역거버넌스 체계 재확립이 3.6점, 고령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기여 지원이 3.5점, 일과 삶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이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 고용촉진, 중장년 조기은퇴자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3.2점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음.

○ 일자리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실현 가능성에서는 일부 격차가 나타남.

– 특히 청년층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음. 또한 중장년 조기 은퇴자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영역으로 평가됨.



〈그림 5-2〉 인천시 일자리 정책영역 관련 정책실행 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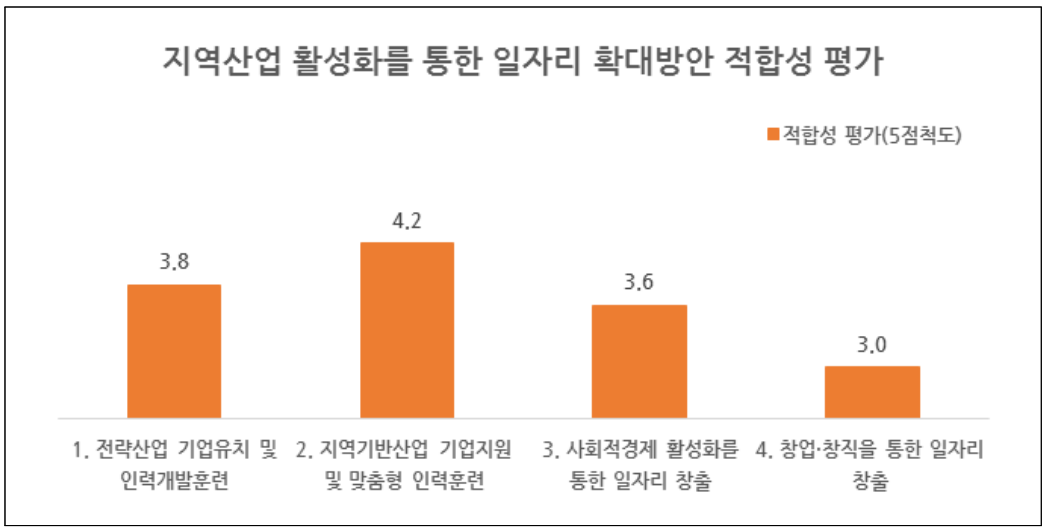
2) 부문별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및 제안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 지역산업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①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유치 및 이와 연계한 인력개발훈련, ② 기존의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인력훈련,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인력훈련이 4.2점으로 다른 방안 보다 더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됨.

– 전략산업 기업유치 및 인력개발훈련이 3.8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3.6점으로 평가되었고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3.0점으로 가장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의견 :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제약요인] 현재의 인천시 일자리 문제는 고용의 질과 양의 악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함. 다시 말해 경제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열악한 일자리는 회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가 고용의 양적확대에도 제약을 가져오는 상황임.

○ [전문가 제안 :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방안]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것임. 따라서 기존의 있는 일자리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

– 근무환경이 열악한 남동공단, 아암물류단지에 대한 교통지원 등을 통해 근로 환경개선

–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고용유인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 확대).

– 미스매칭이 심각한 산업분야의 근로자에 대한 재정 및 복지지원 확대

–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 근로자 확대

– 영세기업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지원

–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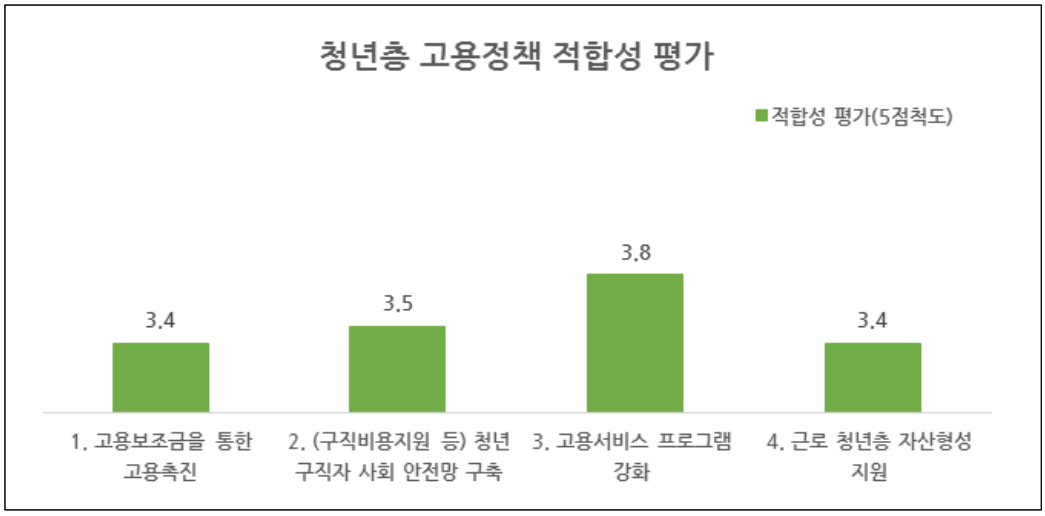
–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청년층 고용촉진

○ 청년층 고용촉진 방안으로 ① 고용보조금을 통한 고용촉진, ② 청년구직자 사회 안전망 구축, ③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④ 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강화가 3.8점으로 다른 방안 보다 적합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청년구직자 사회 안전망 구축이 3.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용보조금을 통한 고용촉진과 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이 각각 3.4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4〉 청년층 고용정책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제안 : 청년층 고용촉진 방안] 청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은 전문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청년층에게 직무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보조금 필요. (근본적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음)

– 8대 전략산업 중 고용친화적 산업을 우선적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활성화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직업교육 체계 마련

– 자기 주도적이며 과제수행 중심의 직무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배양 (에콜42의 성공 사례 참조)

– 기존의 획일화된 상담서비스를 벗어난 전문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창업학교 및 무상 집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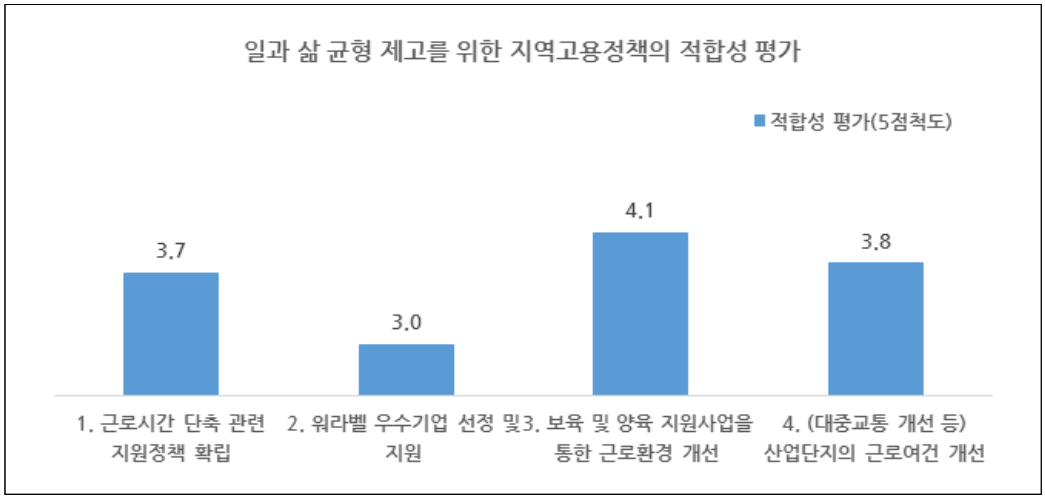
–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 및 우수 근로환경 만들기

일과 삶의 균형

○ 일과 삶의 균형 제고방안으로 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대책 확립, ② 워라벨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③ 보육 및 양육지원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④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의 4가지 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보육 및 양육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신이 4.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원정책 수립은 3.7점,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은 3.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워라벨 우수기업 선정 지원은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그림 5-5〉 일과 삶 균형 제고를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제안 : 일과 삶 균형 제고] 일과 삶의 균형 제고와 관련해서는 주로 보육 및 양육지원을 통해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근로시간 단축이나 우수기업 선정 지원과 관련한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일부 제시됨.

– 기업주의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실천의지 제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대응 방안 컨설팅 제공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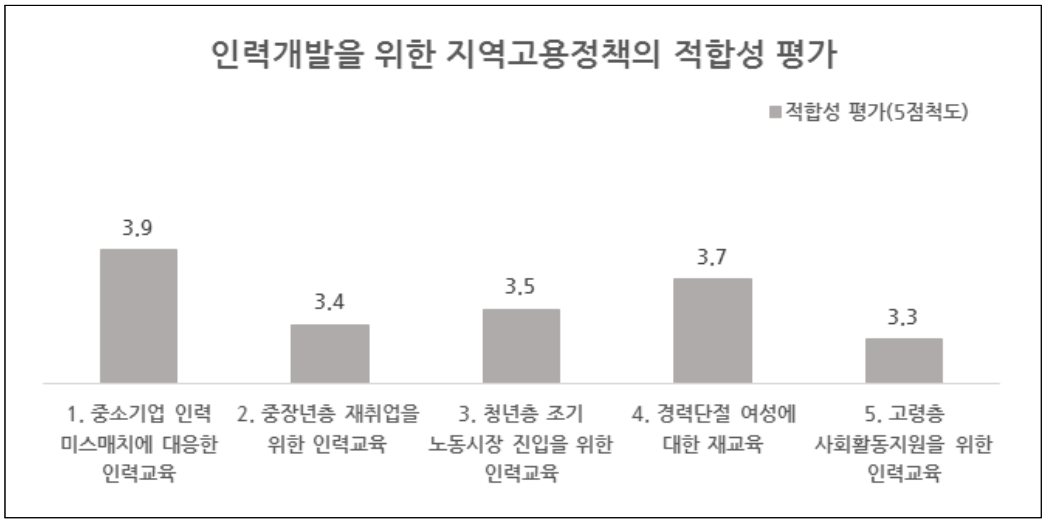
– 산단지역 근처에 보육 및 양육 시설 확보 (특히 새벽, 야간 교대근무자 등을 위한 보육교사 지원 방안)

인력개발 분야

○ 인력개발 정책방안으로 ①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에 대응한 인력교육, ②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인력교육, ③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력교육, ④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 ⑤ 고령층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인력교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에 대응한 인력교육이 3.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이 3.7점이고,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력교육이 3.5점,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인력교육이 3.4점, 그리고 고령층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인력교육이 3.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그림 5-6〉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제안 : 인력개발 분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관리가 중요하고, 다양한 구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력양성체계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미스매치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교육으로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제시됨.

– 중장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이력관리 체계 마련

– 중장년층 생계비용 지급을 통한 중장기 교육훈련 참여 유도

– 단기교육을 통한 유연한 인력양성사업 체계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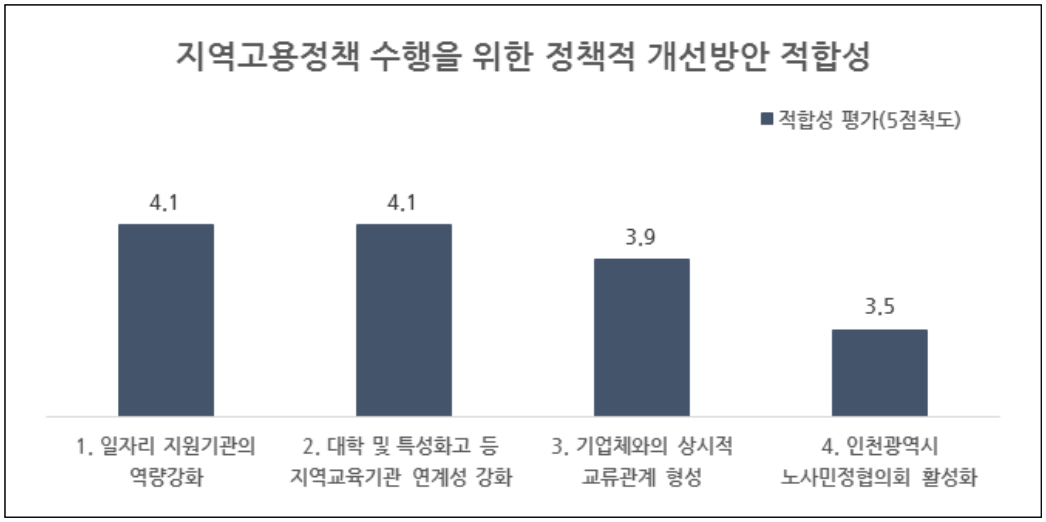
– 고령 숙련기술자와 연계한 청년층 숙련 프로그램 확대

정책수행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일자리 지원정책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 ①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② 지역교육기관 연계성 강화, ③ 기업체와의 상시적인 교류관계 형성, ④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의 4가지 안의 적합성을 평가함.

○ [정책방안 적합성 평가]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강화와 지역교육기관 연계성 강화가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음.

– 기업체와의 상시적 교류형성이 3.9점으로 나타났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는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음.



〈그림 5-7〉 지역고용정책 수행체계 개선방안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의견 : 정책수행체계 개선] 현행 일자리 정책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자리 정책 수행구조의 파편화, 정책구상 및 기획주체의 역량 부족, 총괄 관리역할의 부재에 따른 지원사업 중복, 중장기 방향설정 없는 모방형 단기사업의 반복이 지적됨. 부서 및 수행기관간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사업기획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제시함.

– 일자리재단과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중장기 계획 수립 혹은 일자리 정책의 아젠다를 세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부산의 일자리 아젠다 10 참조)

– 유관기관의 공동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

2.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제 및 방안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정책환경]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수준은 미약한 상황임.

–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기반은 부족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발전 방향에 적합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계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정책과는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산업육성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지방차지단체의 구체적인 수단이 제한적이고 시장의 변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인력교육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계획을 수립.

–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화장품 산업, 첨단자동차와 같이 인천시에 상당한 기반을 갖춘 업종과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인력공급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정책개발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공장의 확산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중기 인력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고령친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정책환경] 인천시의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이 매년 3만5천명에서 4만3천명까지 증가하여 2017년에 50만 명에서 2022년에 69만 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주로 공익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임.

- 2006년에 인천시 고령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1,696명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13,704명 그리고 2016년 28,363명으로 증가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 통계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의한 일자리 창출 비중이 약 72%에 달함. 시장형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전문서비스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6)]
-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인력을 공익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함. 고령층의 인적자원 활용계획 수립과 다양한 사회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는 시점임.

○ [정책과제 및 방안]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

-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성과 연계 채권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원 마련.
- 다양한 사회공헌형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확대.

2) 일하고 싶은 인천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산업단지 및 제조업 밀집지역의 근로환경 개선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체가 밀집하여 고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남동공단,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으로 직주가 분리되어 있고 기업 활동 이외의 기반·사회서비스가 열악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접근성이 취약하고 보육 등 사회서비스가 부재함. 출퇴근 시간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반·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정책과제 및 방안] 교통 및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

6) 시장형사업은 공동작업형(14.3%), 제조판매형(9.2%), 전문서비스형(76.5%)으로 구성됨.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의 경우 창업의 실패사례가 많은 상황이고, 시장형사업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자금이 요구되지만 현재 아이템의 개발이나 초기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 무빙콜 프로젝트와 같이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공단 및 제조업 중심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공급하여 보육환경 개선.

– 공단의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새벽 및 야간 보육서비스 시범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30대-40대 경력단절여성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수는 부족한 편이고 시간제 일자리 사업 창출 등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

– 경력단절 여성층의 재취업의 필요성이 크지만 직무환경이 열악한 사회 서비스업종으로 취업경로가 한정되어 있음. 30대-40대 여성인력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

○ [정책과제 및 방안] 30대-40대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무개발 및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제조-서비스 연계 여성 직무개발을 통해 여성의 취업경로를 다양화 함

– 실질적인 가족친화적 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일터혁신 시범사업 발굴

○ [정책환경]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 높은 이직률과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양질의 노동생활(QWL, Quality of Working Life)은 작업장의 노동생산성 향상, 합리적인 근로문화, 체계적인 직무훈련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7)]

–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평생학습,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등의 영역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들의 일터문화 및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천형 일터혁신 시범사업을 발굴 및 추진.

---

7) 장홍근 외 4인(2015)의 연구는 일터혁신 정책의 진화과정, 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 선진국사례의 시사점 등을 연구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함. 일터혁신을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파악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체에서 경영과 노동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났음을 주장하였음.

–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일터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추진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개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컨설팅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혁신일터를 선정하여 홍보

3) 청년 일자리

인천형 청년보장제도 마련

○ [정책환경]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이지만 비경제활동의 잠재구직자를 포함할 경우 체감실업률이 23% 수준으로 증가하고 취업준비생까지 고려하면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8] 또한 청년층의 취업준비 기간은 평균 11개월임.[9]

–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청년층은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갈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청년보장정책 마련.

– 직업훈련, 직무교육, 창업 등 청년이 원하는 취업 경로를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

– 중앙정부의 구직자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있는 인천시의 청년층에 대해 구직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10][11]

---

8) 청년고용현황.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년 5월 3일)

9) 2018년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우리나라 취준생의 취업준비 비용은 월 평균 29만원 가량으로 분석됨. 평균 취업준비기간은 13개월이며 직종에 따라 공무원은 20개월, 교육직은 2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허핑턴 포스트 신문기사 (2017년 12월 7일)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7/story_n_18751872.html

10)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함. e고용노동뉴스 (2017년 7월 24일)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7881

11)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모집인원은 2,300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프로그램 (http://young.jobaba.net/job/intro.do)

청년층 고용서비스 확대지원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는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수립하고 있음. 청년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청년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고자 시도하고 있음.

– 청년층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청년층이 직장 및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에 소개하고 전파함

–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이 해당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노동시장 진입촉진 및 장기근로 유도

○ [정책환경] 청년층의 중소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임금보조금 정책이 확대 운영되고 있음.[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금보조금 사업임.[13]

– 인천광역시도 1석5조 인천사랑 프로젝트와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조기시장 진입과 고용지속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임금보조금을 통한 청년층 고용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음. 높은 사중손실[14], 낮은 고용유지율 등이 청년인턴제 등의 임금보조금 정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김태욱, 2017).[15]

---

12) 임금보조금 사업은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사업주에 지급되는 임금보조금은 경재침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창출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이후 경제여건의 회복 될 때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3) 문재인 정부는 향후 3-4년 기간 동안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청년 고용문제가 악화될 것을 예상함. 한시적 조치로 2021년까지 임금보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14) 사중손실은 임금보조금이 없더라도 채용을 했을 정책집단에 임금보조금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함.

15) 감사원의 2016년『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후의 고용유지율의 개선이 저조하고,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정규직 고용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사중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임금보조금 사업은 재정투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및 개편.

–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청년층의 고용보조금을 인천광역시의 기업 및 청년층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16)]

– 현재 일부 업종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혜계층 및 지원규모에 대한 확대적용 방식 검토[17)]

4)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정책환경]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단기적인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임.

– 중장기적 발전방향이 부재하기 때문에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시의 지역교육기관, 일자리 동향 변화, 전략산업,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전략계획을 수립.

–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갱신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

–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중장기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프로그램 배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 [정책환경] 근로경력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기퇴직 및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

---

16)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 예를 들면 천안시, 평택시, 수원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추가적인 고용안정 자금을 6개월간 지원함.

17) 경기도의 청년통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2018년에는 5천명을 대상으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씩 참여자가 기여를 하면 3년 이후에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사발전재단의 인천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시 및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개발이 취약한 상황임.

○ [정책과제 및 방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을 한 중장년층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인천시 중장년층 인력뱅크 구축 사업

– 인천시 중장년층 생애경력 설계 및 전직지원 서비스

– 중장년층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및 교육 공간 확보

–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 계획수립

5) 정책수행체계 강화

인천광역시 고용정책 기획 및 집행력 강화

○ [정책환경] 지역 일자리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사업 아젠다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수행기관들이 집행하는 경향이 강함. 인천광역시만의 아젠다가 뚜렷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기관들의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하고 인력 및 조직이 취약함.

–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구의 사업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집행에 한계가 있음.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검토.

–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5대 아젠다 선정

– 일자리 관련 시장분석, 직무개발, 사업발굴 등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가칭 ‘인천광역시 일자리재단’ 수립 검토

지역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환경]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은 부서별, 지원기관별, 군구간의 장벽으로 인하여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이 기관에 따라 별도로 집행되고 있고,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노사민정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못함.

– 파편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사업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상호 모방에 따른 유사사업이 양산되는 결과가 일부 나타남.

○ [정책과제 및 방안] 인천광역시의 주무부서, 지원기관, 군구의 주무부서 간의 협력사업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상위 협력 거버넌스 조직 구성.

–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가칭 '인천광역시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

– 인천광역시 유관기관 협동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 군구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성과공유 제도 운영

주제어▶ 지역 일자리정책, 청년고용, 인력개발, 일자리재단

참고문헌

■ 보고서 및 참고서적

김영수 (2014) 지역산업 고용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전략, 산업연구원

김태욱 (2017)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17(4) 83-126

류장수 (2013)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지역고용노동연구 5(1) 23-46.

박우식 · 박상우 (2012)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일자리공시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3) 155-172

윤윤규 · 장홍근 · 노용진 · 임상훈 (2010)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2013) 한국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2011) 지역고용정책 평가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연구

이혜승 (20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장홍근 · 조성재 · 박명준 · 이영호 · 이호창 (2012)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2010)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월간노동리뷰 9 31-47

주무현 (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와 과제, 고용이슈

부 록

전문가의견조사

인천광역시 일자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일자리 현황진단 및 정책개발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 인천발전연구원 최태림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락처: 032-260-2636, 이메일: tlchoi@idi.re.kr

❑ 지역노동시장 일자리 정책 영역의 중요성 및 실효성

문1) 인천광역시의 고용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의 일자리 정책영역의 중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일자리 정책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2. 산업단지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층 고용 촉진	①	②	③	④	⑤
4. 중장년 조기은퇴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고령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기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교육훈련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일·삶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9. 지역거버넌스 체계 재확립	①	②	③	④	⑤
10. 일자리 지원기관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의 일자리 정책영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일자리 정책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2. 산업단지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층 고용 촉진	①	②	③	④	⑤
4. 중장년 조기은퇴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고령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기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교육훈련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일·삶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9. 지역거버넌스 체계 재확립	①	②	③	④	⑤
10. 일자리 지원기관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지역산업 일자리 확대

문3) 다음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의 적합성(중요성 및 실효성 포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요.

일자리 정책 방안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전략산업 기업유치 및 인력개발훈련	①	②	③	④	⑤
2. 지역기반산업 기업지원 및 맞춤형 인력훈련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4.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문4) 위에서 제시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천광역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약요인:

정책대안:

❑ 청년층 고용촉진

문5) 다음의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적합성(중요성 및 실효성 포괄)을 평가해 주십시오.

일자리 정책 방안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고용보조금을 통한 고용촉진	①	②	③	④	⑤
2. (구직비용지원 등) 청년 구직자 사회 안전망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6) 위에서 제시한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층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책방향:

정책방안:

❑ 일과 삶의 균형

문7) 다음의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중요성 및 실효성 포괄)을 평가해 주십시오.

일자리 정책 방안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정책 확립	①	②	③	④	⑤
2. 워라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보육 및 양육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 개선 등) 산업단지의 근로여건 개선	①	②	③	④	⑤

문8) 위에서 제시한 정책을 포함하여 일·삶 균형과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책방향:

정책방안:

❑ 인력개발 분야

문9) 다음의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고용정책의 적합성(중요성 및 실효성 포괄)을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일자리 정책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에 대응한 인력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인력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층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력교육	①	②	③	④	⑤
4.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	①	②	③	④	⑤
5. 고령층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인력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10) 위에서 제시한 인력개발 영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인력개발 정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책방향:

정책대안:

❑ 정책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문11) 인천광역시가 지역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정책적 개선방안의 적합성(중요성 및 실효성 포괄)을 평가해 주십시요.

주요 일자리 정책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2. 대학 및 특화성고 등 지역교육기관 연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기업체와의 상시적 교류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4.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문12) 위에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가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효과적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과 그 사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책방안:

사유: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일자리 분야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755-8 9335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인천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